발 간 등 록 번 호
2026-KIHF-045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가족서비스 전략 포럼 자료집

2026. 8. 27.(목) 14:00 ~ 16:00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가족서비스 전략 포럼 개요

○ **포럼명:**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가족서비스 전략 포럼

○ **목　적:** 저출생·고령화 사회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서비스 전략 모색을 위한 공론화의 장 마련

○ **일　시:** 2026. 8. 27.(목) 14:00 ~ 16:00

○ **장　소:**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 **주　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프로그램 순서**

시 간	내 용	
14:00-14:1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 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사업지원부 오청미 부장
	개회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박구연 이사장
	사진촬영	(단체사진 촬영)
14:15-14:45	**주제발표 1**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재언 교수
14:45-15:05	**주제발표 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의 방향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인수 연구위원
15:05-15:15	**휴식**	
15:15-16:00	**종합토론**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 운영 고도화 방안** 좌　장: 진미정 교수(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토론자: 안재희 가족센터사업본부장(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소영 기획조정본부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대욱 자치분권제도실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정문 센터장(장성군가족센터)
16:00	**폐회**	

목 차

01 주제발표

-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1p
  유재언 교수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의 방향성 ---------- 53p
  장인수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2 토론문

좌장: 진미정 교수(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인구 위기 × 가족센터에서 길을 찾다 ---------- 75p
  안재희 본부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사업본부)

-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문 ---------- 78p
  김소영 본부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

-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 운영개선 및 정책방향 토론문 ---------- 80p
  전대욱 실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

-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 운영 고도화를 위한 현장의 제언 --------- 83p
  이정문 센터장
  (장성군가족센터)

인구감소 지역 가족센터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발표: 유재언(가천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공동 연구진: 윤성은(구리시가족센터장), 노신애(서울대 박사), 장근호(가천대 연구원)



1

연구 내용 및 구성

①환경 분석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유형 도출, 유형별 특징 및 개별 지역 특성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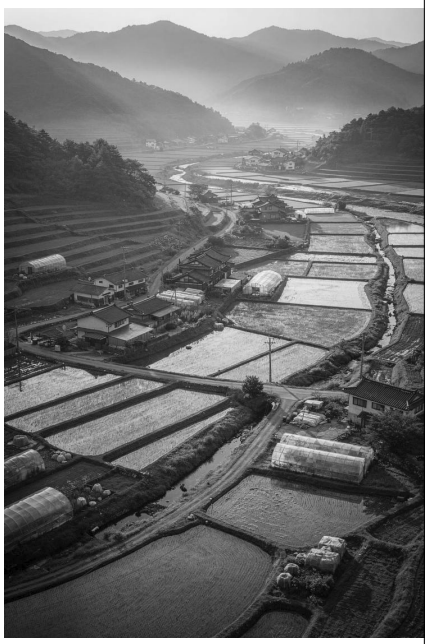
② 운영 실태 분석
가족센터 행정자료·성과조사 분석, 사례조사, 관계자 욕구 질적 조사(FGI)

③서비스 모델 도출
인구감소지역 지원 제도 분석 및 가족센터 운영방안(가족서비스 모델) 제시

2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환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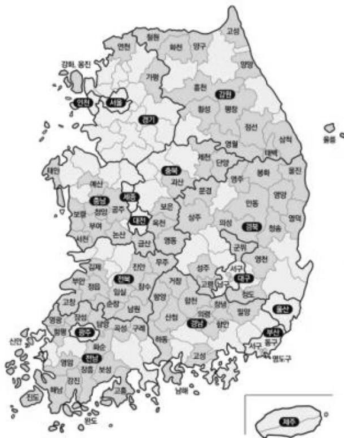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의 지역 특성, 공간군집, 가족센터 운영 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를 종합 분석



3

지정 현황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 현황



법적 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지정 현황

-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 **관심지역:** 18개 시군구

지정 주기

2021년 10월 최초 지정 → 2026년 10월 재지정 예정(증가 예상)

4

지정 현황

지역별 인구감소지역 분포

강원 (12개)
고성·삼척·양구·양양·영월·정선·철원·태백·평창·홍천·화천·횡성

경북 (15개)
고령·문경·봉화·상주·성주·안동·영덕·영양·영주·영천·울릉·울진·의성·청도·청송

전남 (16개)
강진·고흥·곡성·구례·담양·보성·신안·영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

경남 (11개)
거창·고성·남해·밀양·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

그 외 부산(3), 대구(3), 인천(2), 경기(2), 충북(6), 충남(9), 전북(10) 포함 총 89개 시군구 지정.

5

지역 특성

12개 주요 지표 요약

주요 지역 특성	인구감소지역 (89)	관심지역 (18)	비감소지역 (122)	전체 (229)
주민등록인구	53,107	140,838	360,292	223,656
인구증가율	-1.02	-0.86	0.31	-0.30
합계출산율	0.98	0.81	0.78	0.86
고령인구비율	36.54	25.58	19.16	26.42
1인가구비율	40.56	39.77	35.60	37.86
인구천명당외국인수	31.83	33.17	30.71	31.34
1인당 주거상업,공업지역면적	288.13	148.32	105.94	180.08
빈집비율	14.21	11.64	7.79	10.59
보건사회복지사업체비율	2.59	2.56	2.75	2.67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21.36	12.14	6.60	12.77
재정자주도	56.85	47.16	47.35	41.03
사회복지예산비중	24.88	42.96	49.13	39.22

6

지역 특성

지역 유형별 핵심 특성 비교

인구감소지역

인구 가장 적고 인구증가율 최저.
고령인구비율(36.54%), 1인가구비율, 빈집비율이 가장 높음. 재정자주도는 오히려 가장 높음.

관심지역

인구감소지역과 비감소지역의 중간적 특성.
단, **출산율(0.81)**과 재정자주도는
인구감소지역에 더 가까운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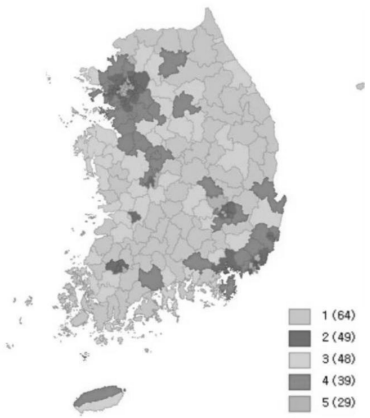
비감소지역

인구 가장 많고 인구 증가 중.
고령인구비율·1인가구비율 최저.
사회복지예산 비중(49.13%)이 가장 높음.

7

공간군집분석

공간군집분석 결과 (전체 5개 군집)



01

군집1 (64개)

인구 최소, 고령비율 높음, 빈집·재정자주도 높음, 사회복지예산 비율 낮음

02

군집2 (49개)

1인가구·외국인 최소, 주거면적 최소, 사회복지예산 비율 가장 낮음

03

군집3 (48개)

외국인 수 최다, 보건복지사업체 비율 최저, 나머지 중간 수준

04

군집4 (39개)

인구증가율 높고, 고령인구비율 낮음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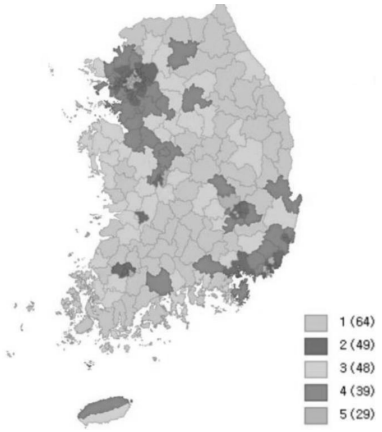
군집5 (29개)

합계출산율 특히 낮고, 1인가구 비율 높고, 재정자주도 낮음

8

군집1

군집1 현황: 소규모 고령 농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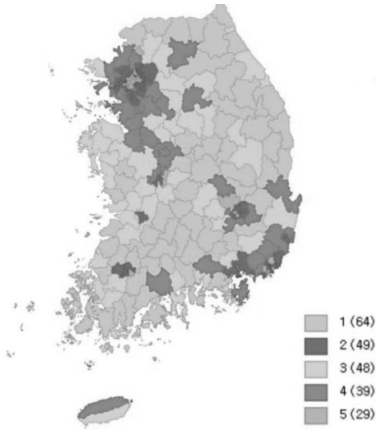


전체 인구수 가장 작고, 고령인구비율 높고, 빈집비율 높고, 재정자주도 높고, 사회복지예산 비율 낮음

주요 포함 지역: 강원(태백·삼척·홍천·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
전남(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함평·장성·진도·신안),
경북(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봉화·울진·울릉), 경남(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등

군집2

군집2 현황: 대도시 밀집 주거형



1인가구·외국인 수 최소,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 최소, 사회복지예산 비율 가장 낮음

주요 포함 지역: 서울(중랑·성북·도봉·노원·은평·양천·강서·서초·강남·송파·강동),
부산(부산진·동래·남구·북구·해운대·사하·연제·기장), 대구(동구·북구·수성·달서),
인천(남동·부평·계양·미추홀), 경기(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고양·구리·남양주·군포·의왕·하남) 등

군집3·4·5

군집3·4·5 현황 요약



군집3 (48개): 외국인 집중형

인구천명당 외국인 수 최다, 보건복지사업체 비율 최저. 충남·전북·경북·경남 일부 및 제주 서귀포시 포함.



군집4 (39개): 인구증가 성장형

인구증가율 높고 고령인구비율 낮음. 세종시, 경기 화성·김포·용인, 울산, 경남 김해·양산 등 성장 도시 포함.



군집5 (29개): 저출산 1인가구형

합계출산율 특히 낮고 1인가구 비율 높고 재정자주도 낮음. 서울 도심구(종로·중구·용산 등), 부산 원도심 포함.

11



지역 특성 분석

감소 지역 특성 레이더 차트

전국 인구 감소 및 관심 지역의 주요 지표를 레이더 차트로 비교 분석. 해당지역(적색), 감소지역평균(청색), 관심지역평균(녹색)을 기준으로 인구, 증가율, 출산율, 고령비, 1인가구 등 12개 지표를 시각화.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12



가족센터 현황

시군구 가족센터 설치 현황

229

전체 행정구역

226

센터 설치 지역

3

센터 미설치 지역

부산중구, 부산강서구, 대전유성구

234

총 센터값

다가·건가 중복 8개 포함

13

예산지원유형

예산지원유형별 가족센터 수: 지역 비교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비감소지역	전체
가	1	1	33	35
나	17	6	49	72
다	2	0	4	6
라	18	3	14	35
마 (울릉군형포함)	50	7	10	67
건가+다가	0	0	8	8
다가	1	0	2	3
	89	17	118	226

핵심 발견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마형(최소예산)이 50개(55.1%)**로 절반 이상. 비감소지역은 나형(40.8%)·가형(27.5%) 집중.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 확인.

14

위탁형태

위탁형태별 가족센터 수: 지역 비교

형태	인구감소	관심	비감소	전체
위탁	72 (80.9%)	15 (88.2%)	124 (96.9%)	211
직영	**17 (19.1%)**	2 (11.8%)	4 (3.1%)	23

인구감소지역은 직영 비율이 기대보다 유의하게 높음. 위탁을 맡을 법인·대학 등이 부족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됨.

15

위탁법인

위탁법인별 가족센터 수: 지역 비교

법인유형	인구감소	관심	비감소	전체
사회복지법인	34	6	40	80
사단법인	19	4	33	56
학교법인	**5 (7.0%)**	2	**34 (27.6%)**	41
재단법인	6	0	9	15
기타	7	3	7	17

유일하게 유의미한 차이: **학교법인**. 비감소지역은 27.6%가 대학 위탁인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7.0%에 불과. 인구감소지역은 사회복지법인 의존도가 높음.

16

공간 소유

공간소유주체별 가족센터 현황

소유형태	인구감소	관심	비감소	전체
지자체 소유 무상임대	76	12	98	186
지자체 소유 유상임대	3	2	7	12
위탁법인 소유 무상임대	5	1	6	12
기타	4	2	16	22

검정 결과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 없음.** 지역 유형에 관계없이 지자체 소유 무상임대가 압도적으로 많음(186개, 79.8%).

17

직원 현황

직원 수(기본·전체): 지역 비교

5.8

인구감소지역 기본직원 평균

7.3

비감소지역 기본직원 평균

26.0

인구감소지역 전체직원 평균

47.6

비감소지역 전체직원 평균

ANOVA 분석 결과 기본직원수(F=11.71***), 전체직원수(F=48.76***) 모두 유의미한 차이. **비감소지역이 인구감소지역보다 직원 수 유의하게 많음.** 전체직원 기준 비감소지역(47.6명)은 인구감소지역(26.0명)의 약 1.8배.

18

참여인원

참여인원: 지역 유형별 비교

인구감소지역

평균 **23,247명** / 중앙값 20,354명

관심지역

평균 **31,338명** / 중앙값 26,62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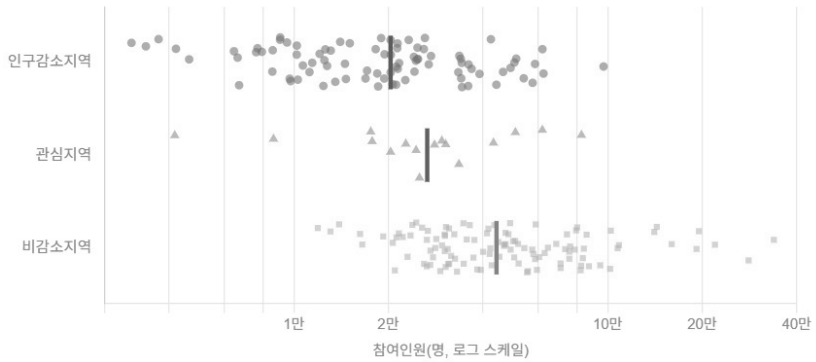
비감소지역

평균 **58,706명** / 중앙값 44,265명



19

참여인원: 지역 유형별 비교



20

참여인원

인구 천명당 참여인원: 역전 현상

432

인구감소지역 천명당 참여(합산)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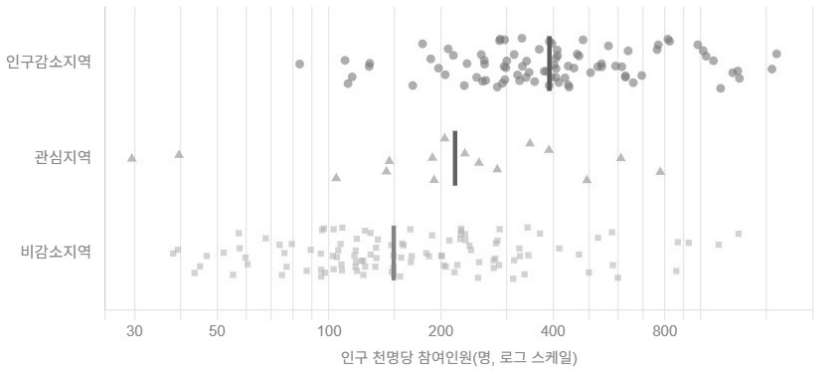
비감소지역 천명당 참여(합산)

핵심 해석

전체 참여인원은 비감소지역이 감소지역의 **2.5배**이지만, 천명당 참여인원으로 환산하면 **인구감소지역이 비감소지역의 2배 이상**. 규모는 작아도 주민 대비 참여율은 훨씬 높음.
ANOVA: 천명당 참여인원 F=23.11*** (감소>관심, 감소>비감소)

21

인구 천명당 참여인원: 역전 현상



22



만족도 조사

2025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 문항 구성

서비스 만족도 (1~5번)

프로그램 만족, 도움 여부, 재이용 의향, 추천 의향, 가족관계 중요도

가족관계 효과 (6-1~6-7번)

역할 인식, 가족 이해, 대화 증가, 갈등 해결, 타가족 이해, 양육정보, 양육 자신감

지역사회·환경 (7~9번)

이웃 관계 확대, 기자재·환경, 안전, 접근 편리성, 시간대 다양성, 담당자 친절·설명

총 N=10,038명 대상. 배경변수: 성별, 혼인여부, 1인가구, 자녀수, 이용연령, 이용기간.

23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지역유형별 비교 결과

문항	인구감소(89)	관심(18)	비감소(122)	F
1. 프로그램 만족	4.68	4.65	4.63	6.89**
7. 지역사회 관계	4.17	4.08	4.01	22.02***
8-3. 접근 편리성	4.37	4.26	4.22	22.2***
8-4. 시간대 다양성	4.19	4.08	4.06	14.68***
10. 전반적 만족	4.53	4.47	4.48	5.34**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 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 평균이 가장 높음.** 가족관계 효과 문항(A6)은 차이 거의 없음. 효과크기는 모든 문항에서 0.01 미만으로 통계적 유의성은 있으나 실질적 차이는 크지 않음.

24



만족도 조사

만족도 핵심 발견: 접근성과 지역사회 관계

접근 편리성 (A8-3)

인구감소지역 4.37 vs 비감소지역 4.22. F=22.2***로 차이 가장 큰 문항 중 하나.

지역사회 관계확대 (A7)

인구감소지역 4.17 vs 비감소지역 4.01. F=25.5***. 소규모 지역에서 센터의 사회적 연결 기능이 두드러짐.

시간대 다양성 (A8-4)

인구감소지역 4.19 vs 비감소지역 4.06. F=14.68***. 운영 유연성에서도 체감 만족 높음.

25

군집별 만족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내부 4개 군집 비교

군집1 (10개)

인구증가율 최저, 1인가구 비율 최고, 재정자주도 낮음

군집2 (37개)

인구 최소, 출산율 최고, 고령비율 높음, 빈집 최다, 재정자주도 높음

군집3 (40개)

외국인 수 최다, 1인당 지역면적 최대

군집4 (20개)

인구 최다, 인구증가율 최고, 빈집 최소, 사회복지결산 비중 높음

ANOVA 결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내부에서는 만족도가 **균질**. 차이는 주로 감소지역과 비감소지역 사이에서 발생하며, 감소지역 내 세부 유형별로 갈리지는 않음.

유일하게 유의한 문항: **7. 지역사회 관계확대(F=6.08***) —** 군집2·3이 군집4보다 높음.

26

대도시 인접 여부

대도시 인접 여부별 만족도 비교

문항	대도시	대도시인접	인접안함	F
8-3. 접근 편리성	4.196	4.489	4.371	7.67***
1. 만족	4.608	4.699	4.688	2.09
10. 전반	4.451	4.530	4.543	2.24

핵심 발견

유일하게 유의미한 차이: **8-3 접근 편리성(F=7.67***)**. 대도시인접 및 인접안함 지역이 대도시 지역보다 접근 편리성 만족이 높음. 나머지 문항은 대도시 인접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없음.

27

종합 인사이트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의 역설적 강점

규모는 작지만 참여율은 높다

천명당 참여인원이 비감소지역의 2배 이상. 소규모 지역에서 센터가 주민 생활의 핵심 거점 역할.

접근성·지역사회 연결에서 체감 만족 최고

접근 편리성(A8-3), 지역사회 관계확대(A7), 시간대 다양성(A8-4)에서 인구감소지역이 일관되게 1위.

직영·사회복지법인 의존 구조

위탁 가능한 주체 풀이 좁아 직영(19.1%) 및 사회복지법인 의존도가 높음. 학교법인 위탁은 7%에 불과.



28

종합 인사이트

예산·인력 격차와 구조적 과제

예산 격차

인구감소지역의 55.1%가 최소예산(마형). 비감소지역은 가형·나형 집중. 예산 지원 구조의 불균형이 뚜렷함.

인력 격차

기본직원 평균: 인구감소 5.8명 vs 비감소 7.3명. 전체직원: 26.0명 vs 47.6명. ANOVA 유의(F=48.76***).

운영 주체 한계

대학 등 전문 위탁 주체 부족으로 지자체 직영 비율이 높고, 위탁 다양성이 제한됨.

29

군집 비교 요약

5개 군집 만족도 순위 요약

군집1 — 전 문항 1위

소규모·고령·농촌형. 20개 문항 모두에서 최고 만족도.

군집3—중상위권

외국인 집중형. 대부분 중간~상위 수준.

군집2·4 — 중위권

대도시 밀집형(2) 및 인구증가 성장형(4). 중간 수준.

군집5—19개 문항 최저

저출산·1인가구·재정자주도 낮은 도심 원도심형. 전반적 만족 최저.

30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중심의 가족센터 운영 실태

31

FGI 참여 지역 현황

지역 구분	광역	지역
인구감소	전라남도	OO군
인구감소	전라북도	OO군
인구감소	강원도	OO군
인구감소	경상남도	OO군
인구감소	경상북도	OO군
인구감소	충청남도	OO군
인구감소	충청북도	OO시
관심지역	대전시	O구
관심지역	경기도	OOO시

32

이용 대상층 변화 및 주력 프로그램

이용 대상층 변화

- 결혼이민자 신규 유입 급감 및 정착기 진입
- 외국인 근로자 및 동반가족 급증
- 일반 지역주민(비다문화)으로 대상 확대

지역별 주력 프로그램 유형

- 실내놀이터·키즈카페 중심 모델
- 부모교육·문화체육 중심 질적 접근
- 대학 자원 연계형
- 외국인 유입 대응형
- 24시간 공동육아나눔터
- 다문화-비다문화 통합 및 세대공감

33

운영상 주요 어려움 ①— 공간·인프라·인력

물리적 공간 및 인프라

SOC 복합화 진전에도 미비 지역 잔존, 공간 협소·분소 필요성 대두, 노후 차량 및 이동수단 부족

조직 및 인력

인력 채용의 지역 격차, 언어발달지도사 등 특수 인력난(구조적 문제), 처우 미흡·이직 빈발, 종사자 소진 및 처우개선 수당 미지급, 인력 활용의 경직성

34

운영상 주요 어려움 ② — 예산·사업·서비스 전달

예산

총액이 아닌 '칸막이' 구조, 아이돌봄 예산 편중, 마형 센터 기본 예산 부족, 인건비 없는 사업 예산 배정, 특별회계 활용 제약

사업·프로그램

사업 방대함과 정체성 혼란, 지자체 재량사업 무분별 이관, 아이돌봄 이질성, 언어발달지원 딜레마

서비스 전달

광역 지역 접근성 문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부담, 야간·주말·명절 개관 부담 가중

35

운영상 주요 어려움 ③ — 거버넌스·평가·기타

거버넌스

지자체 요청 사업 일방적 이관, 광역-부처 간 예산 관리 이원화, 정부합동평가 실적 압박, 유관기관 협업의 우수 사례와 한계 공존

평가

실적 중심 평가의 한계, 실인원-연인원 왜곡 문제, 외국인·비고유사업 실적 미반영

기타

노무·소방안전 등 전문영역 개별 대응 부담, '성평등가족부' 명칭 변경에 대한 현장의 정서적 부담

36



개선방안 ① — 예산·인력·사업 재설계

→ 예산·재정 구조 개편

통합예산화 및 광역-부처 간 정산 일원화, 인구감소 지역 특화 예산 신설, 마형 등 유형별 예산 개편, 처우개선 예산 도-군 매칭 지원

→ 인력 정책 개편

언어발달지도사 처우 개선 및 자격 유연화, 광역 차원 인력풀 운영 검토,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및 수당 체계 개선

→ 사업·프로그램 재설계

지역 특성 반영형 사업 구성(톱다운 제고), SOC 사업 재개·확대, 아이돌봄 분리·광역 관리, 부모교육 강화, 외국인 동반가족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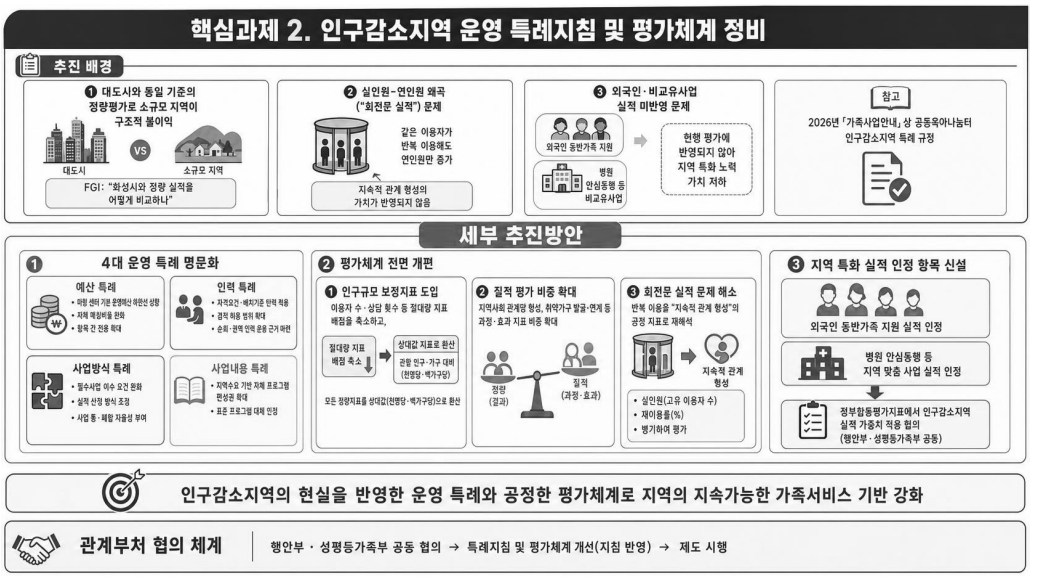
개선방안 ② — 서비스 전달·인프라·평가·거버넌스

1	2
서비스 전달체계 이동수단(차량·기사) 지원 강화, 노란버스 지원에 대한 신중한 검토	**인프라 확충** 소아과·산부인과 등 기초 정주여건 개선, 가족센터 단독이 아닌 통합적 지역정책 접근 필요
3	**4**
평가체계 개편 정부합동평가 지표의 현실적 조정, 외국인 지원 등 지역 특화 사업 실적 인정 및 지표 재설계	**거버넌스 재정립** 성평등가족부·한가원의 명확한 역할 정립, 현장 목소리를 대변할 협회 역할 강화

38


핵심 과제 (대목차)
주요 추진 내용 및 세부 방안 (중목차 및 상세 내용)
1 인구감소지역 특화사업 신설 및 재정 지원 체계 구축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전국 표준화 지침의 한계 극복
• 맞춤형 예산·사업 트랙 별도 편성
2) 참고 사례
• 여가부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3) 세부 추진방안
❶ (사업 자율성 보장) 자체 기획사업 최소 심사로 자율 운영, 사업 간 간섭이 완화
❷ (성과연동형 예산 배분) 사업 결과 평가 기반 차년도 사업비 차등 지원
❸ (하드웨어 예산 연계)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시 가산점 부여
❹ (전달·평가체계 이원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주관)-한국여성정책연구원(평가) 협업
❺ (단계적 확대) 시범 10개 내외 지자체 선정 후 순차 확대
2 인구감소지역 운영 특례지침 및 평가체계 정비
1) 운영 특례지침 확대
(예산 특례) 최소 운영예산 하한선 조정, 자체 매칭 완화, 전용 범위 확대
(인력 특례) 자격·배치기준 탄력 적용, 겸직 허용 확대, 순회·권역 인력 운용
(사업 운영방식 특례) 필수사업 이수 요건 완화, 실적 산정 조정, 통폐합 자율성
(사업 내용 특례) 지역수요 기반 자체 프로그램 편성권 확대
2) 가족센터 평가체계 개편
(규모 편향적 지표 개선) 이용자 수 등 절대량 지표 배점 축소
(인구규모 보정지표 도입) 광역 인구·가구수 대비 상대지표로 환산 산정
3 광역 가족센터 기능 강화 및 권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
1) 광역 가족센터 BPO 체계 도입
• 서비스 영역(아이돌봄 관리 등) 및 벽오피스 영역(민사·회계 등) 광역 이관
• 광주·전남 사례 후 확대, 별도 예산 편성
2) 권역(광역) 단위 전문인력 활용
• 광역 직접 채용 후 권역 내 순회 배치
• 원격서비스(화상 상담 등) 확대
• 인접 지자체 간 인력풀 공유
3) 접경·인접 지역 간 클러스터형 통합사업
(권역별 메가 가족서비스) 인근 2~3개 시·군 연계 (권역 올림픽, 시설 교차 활용)
(자연자원 활용 상생사업) 경계에 걸친 청산·하천 활용 캠프 등
(재원 조달) 지방소멸대응기금 '협력형 계정' 활용 공동 신청
4 서비스 대상 재정립 및 맞춤형 사업 정밀화
1) 서비스 대상 재정립 기본 방향
• 다문화가족 범위 확장(외국인 근로자 포함)
• 세대별 균형 유지
• 잔류 인구 특성 고려 정밀 타깃팅
2) 노인인구
• 조손가족 통합지원(양육 코칭, 학습 지원 등)
• 발굴 체계 연계, 차별 인식 개선
• 노인 대상 신규 프로그램(재무·유산 상담 등) 선도 개발
• 기능 중복 최적
3) 이주노동자와 가족
• 동반배자 가족 정착·적응 서비스 (웰컴대스크, 자녀 교육 등)
• 아프간 특별기여자 모빌 번치마킹 (협력적 정착지원단 구성 등)
• 루트맥 운영 보완
4) 1인가구
• 청년(밀키트/홈가드닝) 및 고령(소셜 다이닝) 분리 운영
• 물리적 공간 매개 연결
5 프로그램 운영 혁신: 세대통합 및 시차제 사업 구조
1) 세대 복합 구성 프로그램 개발
• '3대가 함께하는 가족 문화 제작소'
• '세대 공감 안생 나눔 극장' 등 운영
• 지역 문화 공유 거실 기능 수행
2)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시차제(Seasonal) 사업 구조 재편
농번기(3~10월)
• 주간 집합 교육 축소
• 야간·주말 돌봄
• 찾아가는 단회기 강화
농한기(11~2월)
• 합기 심화 프로그램 (부부 상담, 자격증 취득 등)
• 집중 배치
6 공간 인프라 확충 및 접근성·이동성 강화
1) 생활SOC 가족센터 확충 및 통합 운영
• 설치 확대(국비 지원/매칭 완화)
• 유휴공간 활용
• 복합시설 통합 운영 근거 마련
2) 물리적 환경 인프라 및 병렬형 프로그램 구축
• 매력적 공간 설계
• '원스톱 병렬 프로그램' 구조 (자녀-부모 동행 분리 동시 참여)
3) 공간적 한계 극복을 위한 '찾아가는 가족서비스'
• 이동형 가족센터(웰니스 버스)
• 소규모 학교 연계형
• 경로당 연계형(마을 거실)
4) 이동성 확대를 위한 차량 지원
• '가족 웰니스 복지 차량' 확보
• DRT(수요응답형 버스) 및 바우처 연계
7 지역 복지 통합연계체계 구축(패밀리 허브 모델)
1) 영국 패밀리 허브 모델 시사점
• 'No Wrong Door' 원칙 하에 단일 플랫폼 통합·연계
2) 가족센터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조관 서비스 일할 연계
• 통합 사례관리 회의를 통한 정보 공유
• 공유 인프라 기반 공동 대응
3) 실행 전략
• 지역복지 연계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 실무협의체 운영(위기 가구 조기 발견)
• 공동 인프라 기능 수행
8 스마트(AI) 가족센터로의 고도화 및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1) AI 기반 업무 효율화
• 초기상담·실적 입력 등 정형 업무 AI 자동화
• 생성형 AI 도구 활용 (공문서 초안, 다국어 자동번역 등)
2) 서비스 탐색·신청·연계 고도화
• 맞춤형 서비스 추천
• 원스톱 플랫폼 구축
• 유관 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3) 종사자 유연 근무제 및 인력 재배치
• 시차출퇴근제·탄력근무제(오후 시프트제 등)
• 운영 시간 유연화(지역·토요일 확대)
• 권역별 순환 배치 인력 풀
9 법·제도 정비: 「건강가정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
1)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 국가·지자체 지원 의무 명문화
• 광역 가족센터 법적 지위 및 역할 명시
• 서비스 대상 범위(외국인 등) 명시적 포함
2)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인구감소지역 특례 위임근거 마련
• 재정·인력 배분 세부 기준
• 원격서비스 근거 신설
• 통합연계체계 법적 근거 마련
3) 지자체 조례 정비
• 서비스 대상 범위 확대
• '지자체-가족센터 고용 협약' 등 연계 근거 정비


핵심과제 1. 인구감소지역 특화 자율예산 신설 및 재정 지원 체계 구축
추진 배경
현행 가족센터 사업체계는 전국 표준화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인구감소지역의 특수성 반영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
55.1%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55.1%가 마형(최소예산)에 집중되어 예산 지원 구조의 불균형이 심각함
천명당 참여율은 비감소지역의 2배 이상이나, 이를 성과로 인정하는 체계 기제가 부재함
참고 사례
성평등가족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주관)
이원적 협업체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컨설팅·모니터링·평가)
• 하드웨어는 지방소멸대응기금(3억 원), 소프트웨어는 성평등가족부 예산(5천만 원 ~ 1억 원) 활용
• 부처 간 사업·예산 연계 우수 사례(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초 지자체
자율 설계 사업
성과 기반 차등 배분
• 지자체 자율 설계 사업에 대한 성과 기반 차등 배분으로 지역 특성과 실행력 제고
세부 추진방안
1 특화 자율예산(가칭 「가족센터 지역활력계정」) 신설
• 시·군·구 센터가 자체 기획하는 사업(인건비 포함)에 투입 가능한 포괄보조 방식 자율예산 신설
신규사업분 아니라 기존사업 보충 허용
• 지원 규모: 1개소당 연 1~2억 원
국비 70%·지방비 30% 매칭
(인구감소지역은 국비 80%까지 상향)
•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권장
가족센터 지역활력계정 예산을 지원받는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50% 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권장
• 집행 자율성: 최소한의 계획 심사 인건비·운영비·사업비 항목 간 전용 한도 30%까지 대폭 완화
2 성과연동형 차등 배분 체계
절대 실적(연인원)이 아닌 상대지표 기반 평가
• 천명당 참여율
• 주민 참투율
• 서비스 지속률 등
우수 센터 인센티브
차년도 사업비 최대 20% 가산 및 우수사례 전국 확산
저성과 센터 지원 연계
감액 패널티가 아닌 질중 컨설팅·인력 지원으로 연계
3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예산 연계 구조화
예산 이원화 및 연계
• 하드웨어(공간·시설) → 지방소멸대응기금
•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인력) → 성평등가족부 예산
• 두 재원 연계 신청 시 국비 심사 가산점 부여
거버넌스·네트워크 강화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가족센터 기반 생활서비스' 항목 신설 유도
• 가족센터 센터장 또는 사업 담당 시군구 본청 과장·팀장급 이상 공무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단 또는 위원회에 소속되어 예산 사용 제안하도록 유도
4 전달·평가체계 이원화
사업 주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설팅·모니터링·평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청소년 성장자원사업 모델 준용
• 사업 주관과 평가 기능 분리로 전문성·공정성 강화
사업 전달의 효율성 제고
컨설팅·평가의 독립성 확보
객관적 성과 검증 및 환류 강화
5 단계적 확대 로드맵
1단계 (2027년) 시범 10개 내외 공모 선정
2단계 (2028~2029년) 30개 내외 확대
3단계 (2030년) 89개 전 지역 및 관심지역 18개 정착
기대 효과
인구감소지역 특수성 반영 맞춤형 서비스 확대
재정 지원 형평성 제고 및 예산 집행 효율성 향상
성과 기반 재정 운용으로 센터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로 정책 시너지 창출
지역 정착과 생활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핵심과제 2. 인구감소지역 운영 특례지침 및 평가체계 정비
추진 배경
❶ 대도시와 동일 기준의 정량평가로 소규모 지역이 구조적 불이익
대도시
VS
소규모 지역
FGI: "화성시와 정량 실적을 어떻게 비교하나"
❷ 실인원-연인원 왜곡 ("회전문 실적") 문제
같은 이용자가 반복 이용해도 연인원만 증가
지속적 관계 형성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음
❸ 외국인·비교유사업 실적 미반영 문제
외국인 동반가족 지원
병원 안심동행 등 비교유사업
현행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지역 특화 노력 가치 저하
참고
2026년 「가족사업안내」상 공동육아나눔터 인구감소지역 특례 규정
세부 추진방안
❶ 4대 운영 특례 명문화
예산 특례
• 해당 센터 기준 운영택산 해한선 상향
• 지역 특성에 맞춘 탄력
• 협력 간 전용 확대
인력 특례
• 자격요건·배치기준 탄력 적용
• 경력 허용 범위 확대
• 순회·겸직 인력 공동 근무 허용
사업방식 특례
• 필수사업 의수 요건 완화
• 실적 산정 방식 조정
• 사업 통·폐합 자율성 부여
사업내용 특례
• 지역수요 기반 자체 프로그램 편성권 확대
• 표준 프로그램 재배 인정
❷ 평가체계 전면 개편
❶ 인구규모 보정지표 도입
이용자 수·상담 횟수 등 절대량 지표 배점을 축소하고,
절대량 지표 배점 축소
상대값 지표로 환산
관할 인구·가구 대비 (전생당·백가구당)
모든 정량지표를 상대값(전생당·백가구당)으로 환산
❷ 질적 평가 비중 확대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 취약가구 발굴·연계 등 과정·효과 지표 비중 확대
정량 (결과)
질적 (과정·효과)
❸ 회전문 실적 문제 해소
반복 이용을 "지속적 관계 형성"의 긍정 지표로 재해석
지속적 관계 형성
• 실인원(고유 이용자 수)
• 재이용률(%)
• 병기하여 평가
❸ 지역 특화 실적 인정 항목 신설
외국인 동반가족 지원 실적 인정
병원 안심동행 등 지역 맞춤 사업 실적 인정
정부합동평가지표에서 인구감소지역 실적 가중치 적용 협의 (행안부·성평등가족부 공동)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운영 특례와 공정한 평가체계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가족서비스 기반 강화
관계부처 협의 체계
행안부 · 성평등가족부 공동 협의 → 특례지침 및 평가체계 개선(지침 반영) → 제도 시행

41


핵심과제 3. 광역 가족센터 기능 강화 및 권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
추진 배경
• 순수 군 지역(무주·영월·청양 등)의 극심한 전문인력난, 언어발달지도사 10년째 채용 불가 지역 존재
• 개별 센터 단위로는 노무·회계·소방안전 등 전문영역 대응에 한계
목표
"광역센터의 통합 지원으로 전문성·효율성·접근성을 높여 모든 가족이 체감하는 고품질 서비스 실현"
❶ 광역 가족센터 BPO(업무 위탁) 체계 도입
개념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는 핵심 업무 집중을 위해 비핵심·부수 업무를 외부 전문 조직에 위탁하는 경영전략
백오피스 통합 (광역센터 일괄 처리)
노무·인사
재무·회계
물품·자산관리
소방안전
차량 지원
문서·계약관리
기타 행정
효과
시·군·구 센터는 대민 서비스에 집중
재정 근거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준용, 광역센터가 관할 시·군·구에 재배분 가능한 별도 예산 편성
로드맵
1단계 광주·전남 행정통합 권역 시범
2단계 광역시 및 인구감소지역 다수 시·도 확대
역할: 통합 지원·자원 관리·협력 조정
전문인력 관리
백오피스 통합처리
원격서비스 지원
자원·정보 공유
권역협력·네트워크
광역 가족센터 (광역 거점)
시·군·구 가족센터 (대민 서비스에 집중)
센터 A
센터 B
센터 C
센터 N
가족상담
아이돌봄
부모교육
언어발달지원
가족문화·여가
❷ 권역 단위 전문인력 풀 운영
아이돌봄사·상담사·언어발달지도사 등 확보난 인력을 광역센터가 직접 채용 후 권역 순회 배치
고정 인건비 부담 절감 + 소규모 지역 전문서비스 접근성 동시 확보
이동거리 2시간 한계 인력은 원격서비스와 병행
❸ 원격·비대면 서비스 제도화
화상 상담
비대면 부모교육
원격 언어치료
ICT 기반 서비스 유형 확대 및 수가·실적 인정·평가 기준 정비 병행
❹ 생활권 기반 인접 지자체 인력·자원 공유
광역 경계를 넘는 생활권 단위 (예: 광주 북구-전남 장성) 공동활용 협약체계 마련
광주-전남 통합 등 행정통합 특례 (제3기·319·320조)를 광역센터 법적 지위·재원 근거로 활용
생활권 공동활용 예시
광주 북구
전남 장성군
인력·시설·프로그램·자원 등 공동 활용
❺ 클러스터형 통합사업
인근 2~3개 시·군 연계 "권역 가족 올림픽", 공공체육시설 교차 활용으로 중복투자 절감
지자체 경계 명산·하천 활용 상생 트레킹·가족캠프 등 자연자원 연계
지방소멸대응기금 협력계정, 2개 이상 지자체 공동신청
기대효과
전문성·효율성 향상
비핵심 업무 통합으로 센터 운영 효율 제고
전문인력 확보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
ICT 기반 서비스 확대로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지자체 간 협력으로 자원 공동활용·상생발전
지속가능한 가족지원 체계 구축

42


핵심과제 4. 서비스 대상 재정립 및 맞춤형 사업 정밀화
추진 배경
이용 대상층 급변
• 결혼이민자 신규 유입 급감
• 외국인 근로자 동반가족 급증
• 일반 주민·1인가구로 확대
제도는 여전히 다문화 중심 구조에 머물러
현장과 괴리 심화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춘 서비스 대상 재정립 및 맞춤형 사업 정밀화 필요
세부 추진방안
1 기본 원칙 정립
다문화가족 범위 확장
• 결혼이민자 중심 → 외국인 근로자·동반가족까지 포괄
세대 균형 유지
• 자출생·고령 지역이라도 영유아·학령기 프로그램의 일을 축소를 지양하고, 아동·청소년 사업은 소멸 대응 핵심 축으로 존치
정밀 타깃팅
• 잔류 인구의 취약·다변화 특성 반영
2 조손가족·노인 — '가족센터다움'을 살린 세대통합 지원
조손가족 3축 프로그램 운영
• 조부모 발달단계별 양육 교칭
• 손자녀 정서·학습 격차 해소
• 조부모-손자녀 관계 개선
연계 조기 발굴 경로 구축 & 인식개선
• 행정복지센터·학교·지역아동센터 연계 조기 발굴 경로 구축
• 조손가족을 '결핍 가정'이 아닌 '다양한 가족 형태'로 다루는 인식개선 캠페인 병행
가족 관점 신규 프로그램 개발
• 재무·자산·유산 상담
• 세대·부부 관계 상담
순수 노인 복지·의료 니즈는 명확히 의뢰
• 고독사 예방 등은 노인복지관·보건소로 연계(기능 중복 회피)
3 이주노동자·동반가족 —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F-3-1R 등) 시행 대응
이주가족 웰컴데스크
• 통·번역, 건강보험·주민등록·자녀 학교배정 원스톱 지원
언어·교육 지원 확대
• 방문 한국어·언어발달 지원의 지역특화형비자 동반자녀 확대 적용
• 배우자 취업 연계형 한국어교육
'이주가족 정착지원협의체' 구성
• 울산 동구 특별기여자 모델 벤치마킹
• 지자체·가족센터·고용주·종교문화 커뮤니티·자원봉사조직 참여
• 초기 6개월 가구별 정착도우미 배정
상호이해 교육
• 종교·식문화 갈등 예방을 위한 입주 전후 상호이해 교육
투트랙 운영
• 노동자 본인 대상 "상생 커뮤니티 데이"
• 동반가족 특화 서비스 병행
4 1인가구 —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형성
청년 1인가구
• 밀키트 공동제작·홈가드닝 등아리 등 관계망 형성
고령 1인가구
• 식사 나눔방(소셜 다이닝) 분리 운영
물리적 공간을 매개로 한 고립 해소 및 지역 안착률 제고
5 조례 정비
가족센터 서비스 대상에 외국인 주민 및 동반가족 명시적 포함
(사각지대 대응)
모든 가족이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서비스로 지역 정착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족센터 구현

43


핵심과제 5. 프로그램 운영 혁신 — 세대통합 및 시차제 사업 구조
추진 배경
• 과도한 생애주기·대상별(일반 vs 다문화) 세분화로 소규모 지역 문제 곤란 및 계승 간 단절
• 도시형 매월 균등 회기제가 농번기·농한기 이원 생활리듬과 부정합
목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계절과 생활리듬에 맞춘 유연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공동체 회복과 가족 삶의 질 향상 실현
1 세대 복합 구성 프로그램 개발
3대(代) 가족 문화 제작소
조부모·부모·자녀 한 팀 → 지역 역사·로컬푸드 소재 브이로그·공예품 제작
브이로그 제작
공예품 제작
세대 공감 인생 나눔 극장
시니어 자전 스토리를 청년·청소년이 각색, 온 가족이 배우·관객으로 참여하는 연극
가족센터, '지역 문화 공유 거실'로 전환
문화·여가 인프라 부족 지역에서 가족센터를 '지역 문화 공유 거실'로 기능 전환, 대상별 경계 해소로 공동체 연대감 유지
가족센터
2 농어촌 특성 반영 시차제(Seasonal) 사업 구조 재편
농번기 (3~10월) 바쁜 시기에는 '짧고, 유연하게'
주간 집합교육 축소
필요 최소 회기만 운영 (집중형·온라인 연계)
야간 긴급 아이돌봄·주말 품앗이 돌봄방
야간·주말 돌봄 지원으로 부모 영농 활동 지원
찾아가는 30분 단회기 틸리버리 강좌
마을회관·영농현장 방문 마이크로 러닝(30분) 제공
봄
여름
가을
겨울
농한기 (11~2월) 여유 시기에는 '깊이, 길게'
8~16회기 장기 심층 프로그램
계획된 장기 프로그램을 집중 배치하여 학습 효과 극대화
부부 심층 관계 상담 프로그램
관계 회복·소통·갈등 해결 전문 상담 제공
바리스타·제과제빵 자격과정 & 다문화 정착 고도화 아카데미
역량 강화·취업 연계·정착 지원 심화 과정
3 운영 성과 관리
계절별 이용 데이터 분석 기반 프로그램 사전 배치, 참여율 저조 시간대 자동 조정
데이터 수집
• 이중자 수, 참여율, 만족도
• 시간대별·요일별 이용 현황
• 계절(농번기/농한기) 특성 데이터
데이터 분석
• 계절·계별별 이용 패턴 분석
• 프로그램별 성과 비교
• 저조 시간대·프로그램 도출
프로그램 사전 배치 및 조정
• 계절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
• 저조 시간대 자동 조정
• 지원(강사·공간) 효율 배분
모니터링 및 개선
• 실시간 모니터링
• 참여자 피드백 반영
• 지속적 개선 및 성과 향상
기대 효과
세대통합으로 가족 유대 강화
계절·생활리듬에 맞춘 유연한 서비스 제공
공동체 연대감 회복 및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율·만족도 및 운영 효율성 향상

44


핵심과제 6. 공간 인프라 확충 및 접근성·이동성 강화
추진 배경
• SOC 복합화에도 미이 지역 잔존, 공간 협소·분소 필요성, 노후 차량 문제(무주 "차량 버리지도 못함", 영월 차량 운행에만 직원 3명)
• 넓은 면적 · 낮은 인구밀도 · 취약한 대중교통으로 거점형 서비스만으로는 사각지대 발생
공간 협소·분소 필요
넓은 면적 · 낮은 인구밀도
취약한 대중교통
노후 차량 문제
차량 버리지도 못함
차량 운행에만 직원 3명
목표
누구나 가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와 이동 환경을 구축하여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접근성 · 이동성 강화
세부 추진방안
1 생활SOC 가족센터 확충 및 통합 운영
신규 설치 국비 지원 확대 및 지방비 매칭 완화
빈 사무실 · 공공시설 여유공간을 분소 · 교육실 · 공동육아나눔터로 활용 (임차료 · 리모델링비 지원)
의정부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국공립어린이집 · 다함께돌봄센터 · 실내놀이터 · 도서관 · 카페 등 연계 · 통합 운영) 벤치마킹
→ 통일 SOC 내 상이한 소관 부처 · 기관 간 공간 · 인력 · 예산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침 · 회계처리 근거 정비
어린이집
돌봄센터
실내놀이터
도서관
카페
연계 · 통합 운영
공간 통합
인력 공동활용
예산 공동운영
2 지역 특성 반영 매력적 공간 설계
키즈카페 · 실내놀이터, 아동 · 청소년 스포츠시설(클라이밍 · 요가 · 댄스), 작은 영화관 · 북카페
강원 영월군 모델 벤치마킹 (SOC의 1/3 이상 실내놀이터 배치 → 인구 3.5만 지역 연 이용자 4만 명)
키즈카페 · 실내놀이터
클라이밍 · 요가 · 댄스
작은 영화관
북카페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매력적 공간 조성
3 원스톱 병렬형 프로그램 구조
자녀는 1층 스포츠실, 부모 · 조부모는 2층 부모교육 · 테라피 동시 참여 → 이동부담 완화, 가족 전체 방문 동기 부여
2F
부모교육 · 테라피
• 부모교육
• 심리상담
• 테라피 프로그램
1F
스포츠실
• 농구
• 클라이밍
• 요가 · 스트레칭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원스톱 병렬형 프로그램
4 찾아가는 가족서비스
가족 웰니스 버스
읍 · 면 행정복지센터 · 지역아동센터 · 작은도서관을 주 1회 분소로 활용, 상담사 · 강사 · 돌봄인력 팀 순회
소규모 학교 연계형
학교 방과후 연계 매칭 클래스 (폐교 활용 + 타깃층 확보 상생)
경로당 연계형
독거노인 자기돌봄 프로젝트, 상생 발상(소셜 다이닝), 고독사 선제 예방
주민 결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가족서비스
5 이동수단 지원(최우선 과제)
노후 차량 교체 지원(전기 탑차 · SUV, 지방소멸대응기금 ·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비 활용)
지자체 수요응답형버스(DRT) · 실버택시와 프로그램 스케줄 연계, "지자체 – 가족센터 교통 협약" 추진
노란버스는 안전관리 부담 고려 신중 검토, 운전기사보다 사설관리 인력 인건비 지원 선행. 또는 버스 및 운전기사 계약, 관리는 광역 가족센터에서 담당(BPO)
전기 탑차
SUV
DRT
실버택시
프로그램 스케줄 연계
운영 협력 체계
중앙정부
재정 · 제도 지원
지자체
공간 · 교통 인력 지원
가족센터
프로그램 · 운영
지역기관 · 주민
기대 효과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접근성 · 이동성 향상
가족 만족도 · 이용률 증가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활성화

45


핵심과제 7. 지역 복지 통합연계체계 구축 — 패밀리 허브 모델
추진 배경
복지관 부재 지역에서 가족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 역할 대행 (무주 "우리는 종합사회복지관")
기관 간 데이터 벽으로 서비스 중복 · 누락 발생
참고 사례
영국 패밀리 허브(Family Hubs)
'No Wrong Door' 원칙 하에 0~19세(장애 아동 25세) 가족 대상 보건방문 · 정신건강 · 고용지원 · 의무교육 · 민간 자원봉사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 · 연계
No Wrong Door
Family Hubs
보건방문
의무교육
정신건강
민간 자원봉사
고용지원
어느 문으로 들어와도 OK!
세부 추진방안
1 'No Wrong Door' 원칙 적용
어느 기관 문으로 들어와도 유관 서비스가 일괄 연계되는 단일 플랫폼 구축
보건소 · 아동복지센터 · 노인복지관 · 교육지원청 서비스를 가족센터 중심으로 통합 · 연계
구분 | 기존 : 기관별 파편화 | 개편 : 가족센터 중심 통합 허브
접근방식 | 주민이 각 기관 각자 방문 | 방문 시 유관 서비스 일괄 연계 (No Wrong Door)
정보공유 | 기관 간 데이터 벽, 중복 · 누락 | 통합 사례관리 회의로 정보 공유
자원관리 | 한정 인프라 경쟁 | 공유 인프라 기반 공동 대응 · 의회
2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가족센터 내 지역복지 연계 전담 인력 배치
조손가족 · 이주가족 · 1인가구 등 전 대상의 발굴 – 연계 – 사례관리 전담
단순 안내를 넘어 복합위기 가구 적시 연결
발굴
연계
사례관리
조손가족
이주가족
1인가구
기타 가족
3 통합 사례관리 회의 운영
분기별 지역 복지 · 보건 · 교육 실무협의체 운영 → 위기 징후 가구 조기 발견(Early Help)
기관 간 정보 공유 · 공동 대응으로 중복 · 누락 방지
가족센터 (허브)
보건소
기타 복지 기관
통합 사례관리 회의(분기별)
아동복지 센터
노인복지관
교육지원청
위기 징후 가구 조기 발견 (Early Help)
정보 공유·공동 대응 중복 · 누락 방지
4 공유 인프라 기반 구축
조손가족 · 이주가족 · 1인가구 등 전 정책 대상의 발굴 – 연계 – 사례관리를 뒷받침하는 공통 인프라로 기능
통합연계체계 · 통합 사례관리 회의의 법적 근거 마련(핵심과제 9와 연계)
공통 인프라
통합 정보 플랫폼
공유 자원 네트워크
공동 사례관리 시스템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법적 근거 마련(조례 · 지침 등)
핵심과제 9. 법 · 제도 기반 강화와 연계
운영 흐름도
주민(가족)
어느 문으로 들어와도 OK!
가족센터(지역 복지 통합 허브)
접수 · 상담
정보 확인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연계 기관(One Network)
보건소
아동복지센터
노인복지관
교육지원청
고용센터
지역자원 (민간 · 자원봉사 등)
기대 효과
서비스 중복 · 누락 방지 및 사각지대 최소화
복합위기 가구 조기 발견 · 적시 지원
가족 중심의 통합적 삶의 질 향상
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자원 효율성 제고

46


핵심과제 8. 스마트(AI) 가족센터 고도화 및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추진 배경
• 군 단위 센터의 짧은 근속연수, 1인당 다수 행정업무, 야간·주말·찾아가는 사업으로 소진 심화
• 반복·정형 행정업무 과중
야간·주말 프로그램
찾아가는 사업
많은 행정업무
업무 자동화
서비스 고도화
AI
스마트(AI) 가족센터
근무여건 개선
지속가능한 가족센터
세부 추진방안
1 AI 기반 업무 자동화
AI가 반복 업무는 덜어주고, 상담과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기상담(사정) 보조
상담기록 작성
대상자 정보·서비스 이력 관리
실적 입력 자동화
생성형 AI 활용
AI
공문 초안
사업계획서 브레인스토밍
다문화 가정 안내문 다국어 자동번역
AI가 업무를 똑똑하게! 종사자는 사람 중심 서비스에 집중!
2 서비스 탐색·신청·연계 고도화
필요한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맞춤형으로 연결!
이용가정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추천
원스톱 안내·신청 플랫폼 구축
유관 부처·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통합 관리 프로세스
상담
사정
이수
사례관리 결과
성과·통계
맞춤 추천·원스톱 신청·통합 관리로 서비스 만족도 UP!
3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유연한 근무제 운영
시차출퇴근제·탄력근무제
• 주말 프로그램 주에 평일 오전 휴무 또는 오후 시프트제(13:00~21:00)
• 주 40시간 준수·휴식권 보장
운영시간 유연화
• 방문을 저조한 평일 오전(09:00~11:00)을 행정 집중·휴관 시간으로 조정
• 저녁·토요일 운영 확대
평일 오전(09:00~11:00) 행정 집중·휴관
저녁·토요일 운영 확대
처우 개선
• 호봉 현실화, 가족 수당·시간외수당 지급 정상화 (도·군 매칭 지원)
언어발달지도사 처우 현실화 및 자격 유연화
• 2009년 이후 등결탄 처우 개선
• 유아교육·보육교사 자격자의 언어촉진 업무 허용 등 자격 유연화
권역별 순환 배치 인력풀 운영
• 권역별 인력풀을 구성하여 순환 배치
• 고정 인건비 부담 절감 및 서비스 질 제고
A센터
C센터
일하기 좋은 환경이 더 나은 가족서비스를 만듭니다!
기대 효과
업무 효율성 향상
AI 자동화로 행정업무 부담 감소, 핵심업무 집중
서비스 접근성·만족도 향상
맞춤 추천·원스톱 서비스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종사자 소진 감소·근속 안정
유연근무·처우개선으로 근무만족도 및 근속률 상승
예산 효율성 제고
인력 순환·업무 자동화로 운영비 절감, 성과 극대화
지속가능한 가족센터 구현
스마트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지역 맞춤 서비스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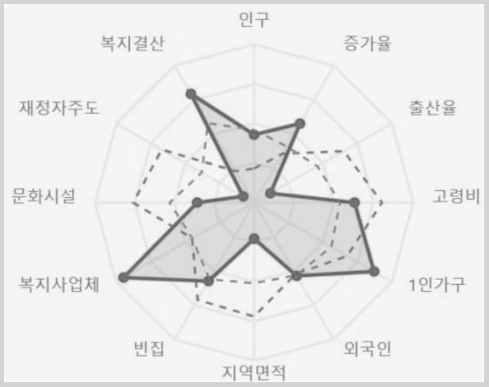

핵심과제 9. 법·제도 정비 — 「건강가정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배경
• 건강가정기본법·하위법령에 "인구감소지역" 직접 명시 조항 부재로 지원의 강행성 도출 곤란
• 상위법(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5조, 균형성장특별법 제21조, 인구전략기본법 제28조)의 강행규정을 실효화할 하위 근거 미비
정비 목표
법적 근거 강화
인구감소지역 가족지원의 강행성 확보
지원체계 명확화
광역·지역 연계와 역할·책무 명확화
대상·서비스 확대
외국인 주민·동반가족 포함 포용적 서비스 제공
차등 지원 실효화
특례·차등지원 근거 마련으로 효율적 지원 실현
자자체 연계 강화
유관 정책 연계 및 조례 정비로 실행력 제고
세부 추진방안
1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건강가정 기본법
인구감소지역 가족 및 가족센터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 의무 조항 명문화
광역 가족센터의 법적 지위 및 역할(권역 지원·BPO·인력풀 운영) 명시
서비스 대상 범위에 외국인 주민 및 동반가족 명시적 포함
2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인구감소지역 특례의 위임근거 마련 (차등 지원 강행성 확보)
광역센터–시·군·구 센터 간 재정·인력·사업 배분 세부 기준 규정
원격서비스·권역 단위 서비스 제공 근거 신설
지역 복지 통합연계체계·통합 사례관리 회의 법적 근거 마련
3 상위 계획 반영
•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 기본계획에 "인구감소지역 가족서비스 강화" 과제 포함, 제33조 연도별 시행계획에 추가 지원 명시
• 성평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지침에 인구감소지역 차등지원 기준 명시
4 지자체 조례 정비
가족센터 서비스 대상 범위 확대 (외국인 주민·동반가족 포함)
지자체–가족센터 교통 협약 등 유관 정책 연계 근거 정비
법·제도 정비 연계 구조
상위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균형성장특별법 제21조
지역 간 균형발전 시책 추진
인구전략기본법 제28조
지방 인구정책 지원
하위법령 정비
「건강가정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지원의 강행성·실효성 확보
가족센터 운영·지원 강화 (광역·지역 연계)
인구감소지역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인구감소지역 지속가능성 제고
기대효과
✓ 법적 근거 강화로 안정적·지속적 지원 가능
✓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완화 및 형평성 제고
✓ 외국인 포함 가족의 포용적 지원 확대
✓ 지역·권역 단위 효율적 운영 및 성과 제고

부산권

지역 특성 — 감소 부산 서구 · 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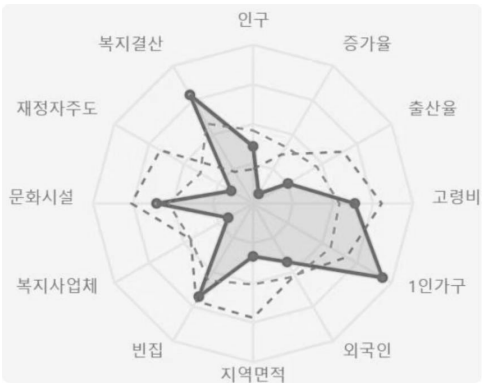
부산 서구

인구, 증가율, 출산율, 고령비, 1인가구, 외국인, 복지사업체 지표에서 높은 수치를 보임.
재정자주도·문화시설·복지결산은 감소지역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음.



부산 동구

인구, 증가율, 출산율, 고령비, 1인가구, 외국인, 복지사업체 지표에서 높은 수치를 보임.
재정자주도·문화시설·복지결산은 감소지역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49

부산대구권

지역 특성 —감소 부산 영도구 · 대구 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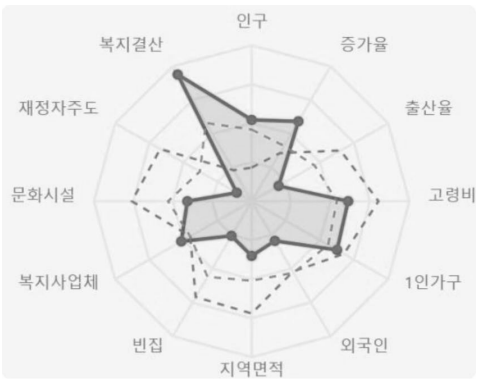
부산 영도구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복지결산 전반에서 중간 이상 수치를 기록.



대구 서구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 등 주요 지표에서 높은 수치. 감소지역평균 대비 대부분 지표에서 우위를 보임.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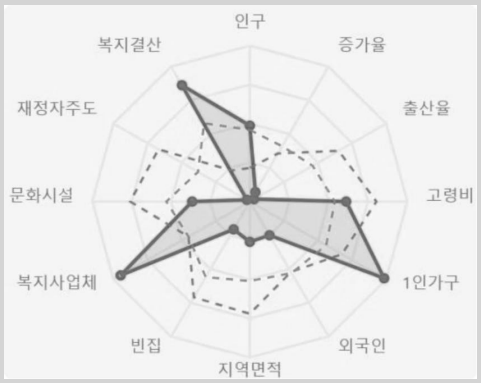
50

대구권

지역 특성 — 감소 대구 남구 · 군위군

대구 남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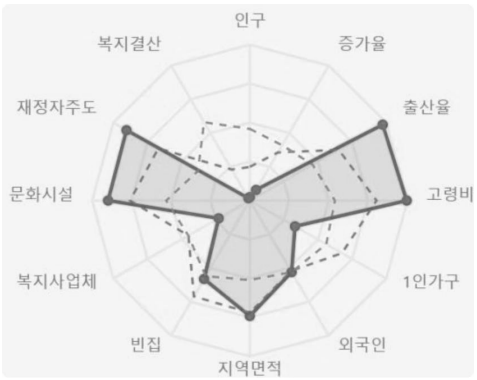
1인가구·복지사업체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나, 인구·증가율 등은 낮은 편. 전반적으로 감소지역평균과 유사한 수준.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대구 군위군

출산율·고령비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며, 인구·증가율은 낮음. 농촌형 고령화 특성이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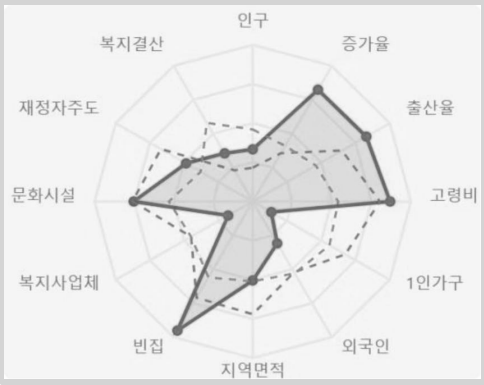


인천권

지역 특성 —감소 인천 강화군 · 옹진군

인천 강화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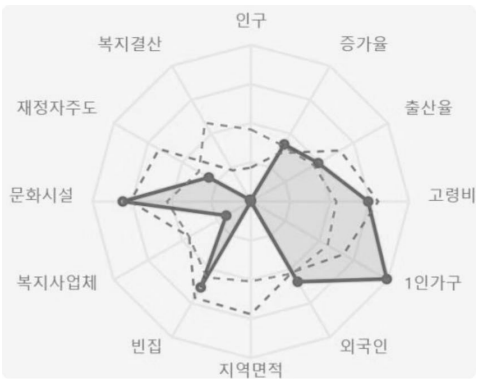
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복지결산 전반에서 높은 수치. 고령비·1인가구는 감소지역평균도 높음.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인천 옹진군

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 등에서 높은 수치. 고령비·1인가구는 감소지역평균도 높으며, 증가율·출산율은 관심지역평균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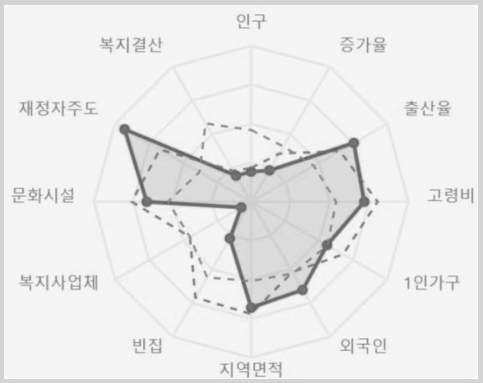


경기권

지역 특성 — 감소 경기 연천군 · 가평군

경기 연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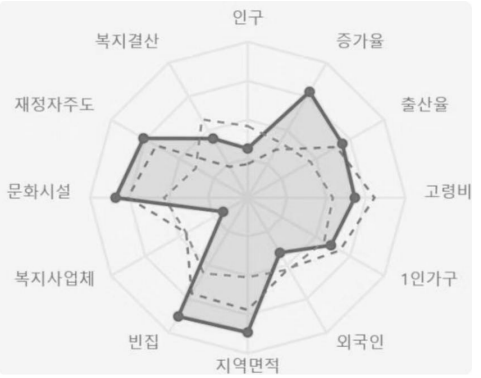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 전반에서 높은 수치. 감소지역평균·관심지역평균 대비 우위.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경기 가평군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 전반에서 높은 수치. 감소지역평균·관심지역평균 대비 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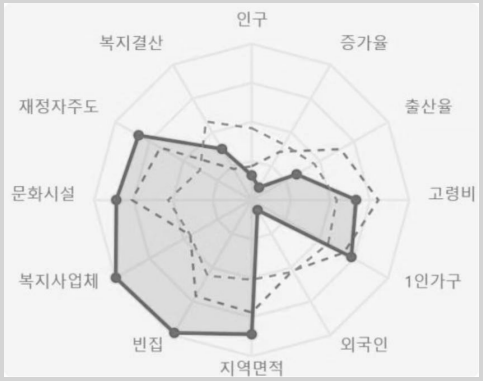
53

강원권

지역 특성 —감소 강원 태백시 · 삼척시

강원 태백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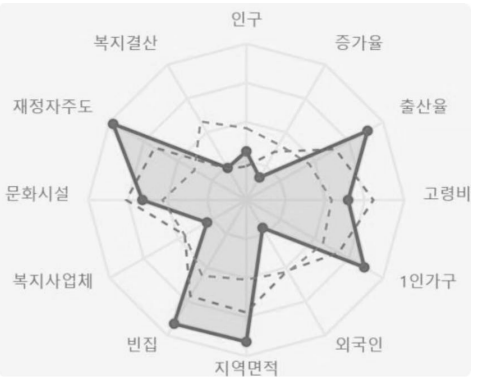
감소지역평균 대비 대부분 지표에서 높은 수치. 빈집·지역면적은 관심지역평균보다 낮은 편이며,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의 지역 특성을 보임.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강원 삼척시

출산율·고령비·1인가구에서 감소지역평균 및 관심지역평균 대비 현저히 높은 수치. 전반적으로 감소지역평균을 상회하는 지역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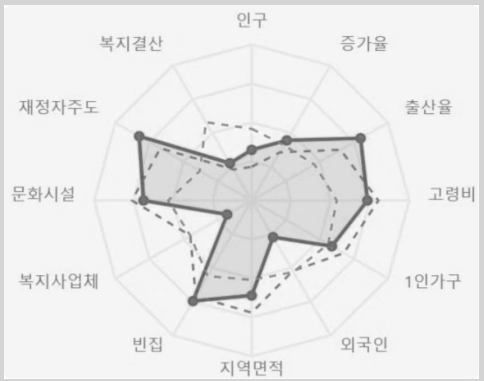
54

강원권

지역 특성 — 감소 강원 홍천군 · 횡성군

강원 홍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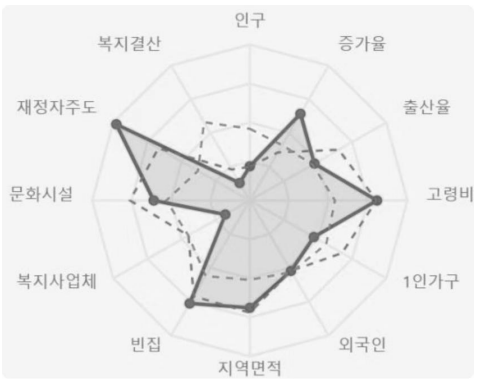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 전반에서 감소지역평균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강원 횡성군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 전반에서 감소지역평균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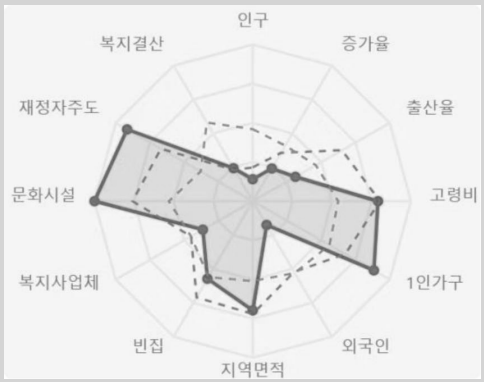


강원권

지역 특성 —감소 강원 영월군 · 평창군

강원 영월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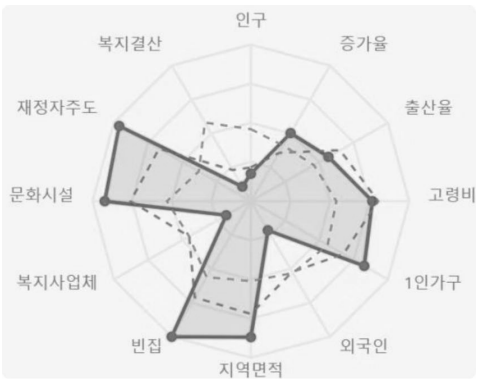
고령비·1인가구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나, 재정자주도·복지결산·인구·증가율 등은 낮은 편. 고령화 특성이 두드러지는 지역.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강원 평창군

고령비·1인가구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나, 재정자주도·복지결산·인구·증가율 등은 낮은 편. 고령화 특성이 두드러지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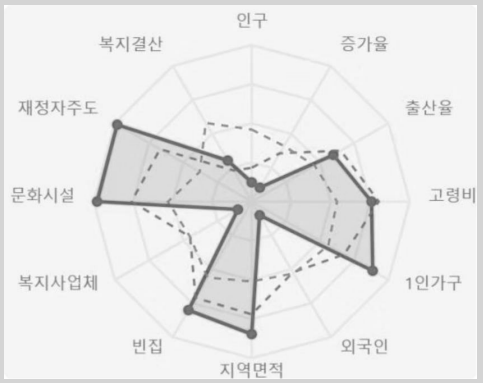


강원권

지역 특성 — 감소 강원 정선군 · 철원군

강원 정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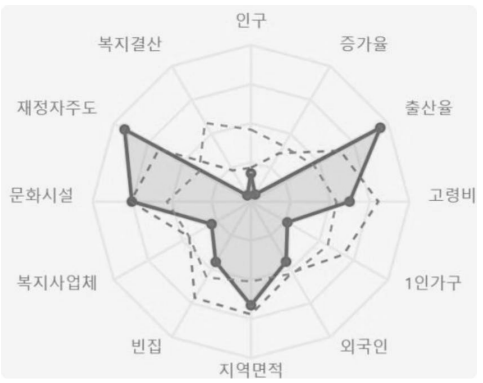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 전반에서 낮은 수치. 감소지역평균·관심지역평균과 유사한 수준.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강원 철원군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 전반에서 낮은 수치. 감소지역평균·관심지역평균과 유사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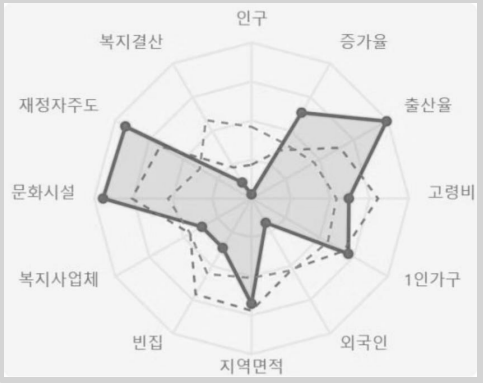
57

강원권

지역 특성 —감소 강원 화천군 · 양구군

강원 화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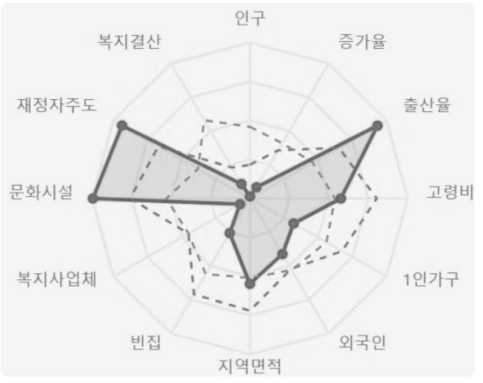
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문화시설·재정자주도에서 높은 수치. 지역면적은 낮은 편이며, 인구·외국인·빈집·복지사업체·복지결산은 중간 수준.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강원 양구군

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문화시설·재정자주도에서 높은 수치. 지역면적은 낮은 편이며, 인구·외국인·빈집·복지사업체·복지결산은 중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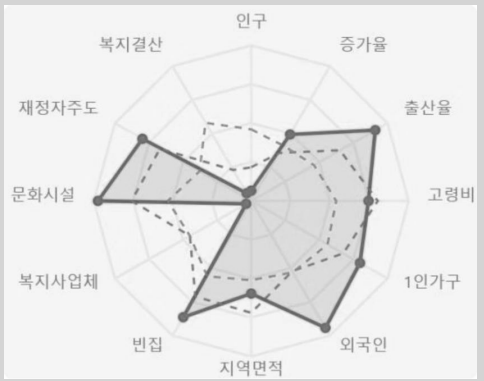
58

강원권

지역 특성 — 감소 강원 고성군 · 양양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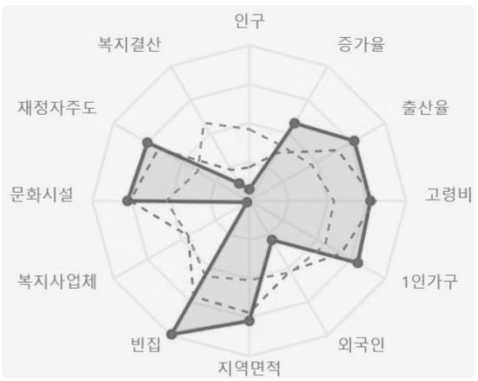
강원 고성군

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에서 높은 수치, 인구·복지예산·재정자주도·문화시설·복지사업체·빈집은 낮은 편.



강원 양양군

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에서 높은 수치, 인구·복지예산·재정자주도·문화시설·복지사업체·빈집은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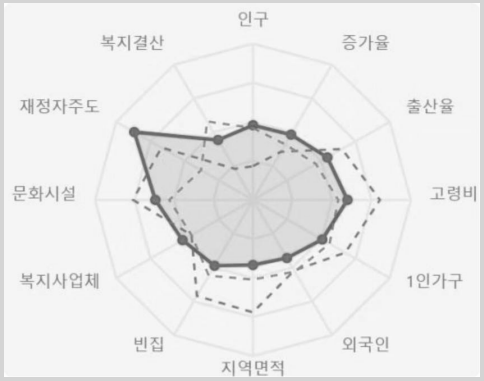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충북권

지역 특성 —감소 충북 제천시 · 보은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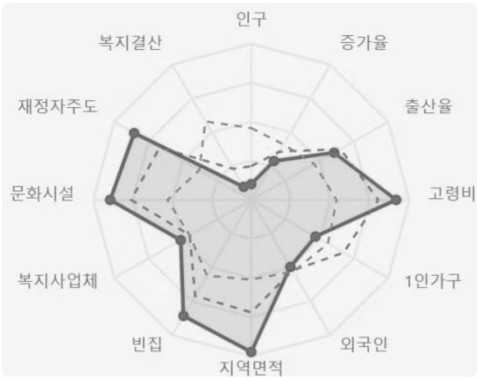
충북 제천시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복지결산 전반에서 감소지역평균 대비 높은 수치.



충북 보은군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복지결산 전반에서 감소지역평균 대비 높은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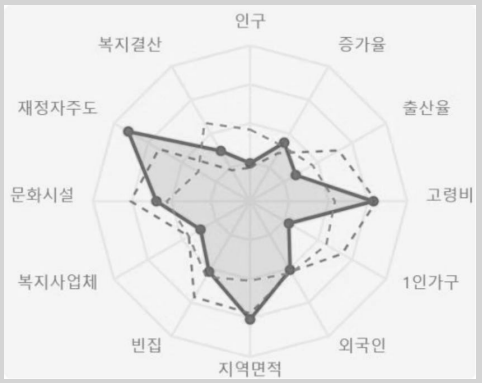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충북권

지역 특성 — 감소 충북 옥천군 · 영동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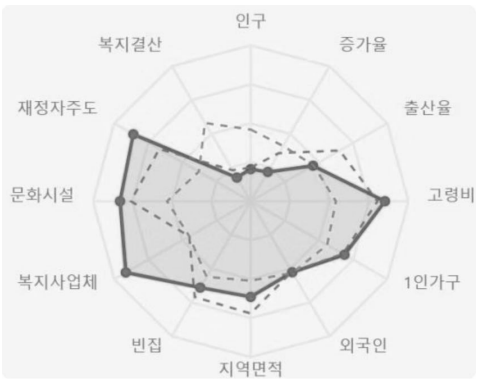
충북 옥천군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 전반에서 감소지역평균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



충북 영동군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 전반에서 감소지역평균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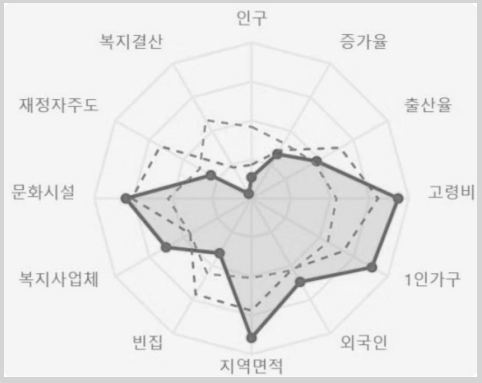
61

충북권

지역 특성 —감소 충북 괴산군 · 단양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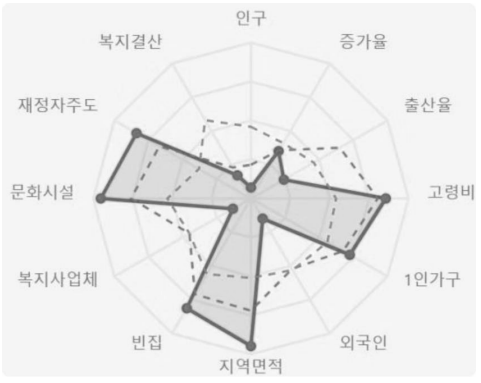
충북 괴산군

고령비·1인가구에서 높은 수치(해당지역·감소지역평균·관심지역평균 모두 높음).
인구·증가율·출산율·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복지결산은 낮은 편.



충북 단양군

고령비·1인가구에서 높은 수치(해당지역·감소지역평균·관심지역평균 모두 높음).
인구·증가율·출산율·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복지결산은 낮은 편.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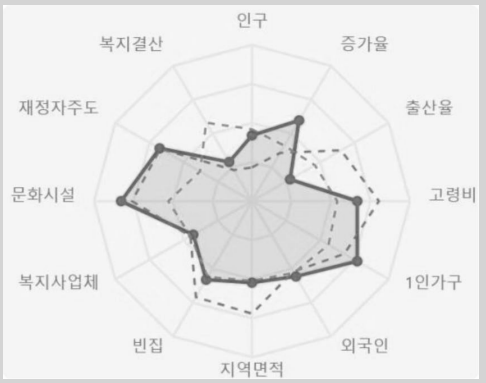
62

충남권

지역 특성 — 감소 충남 공주시 · 보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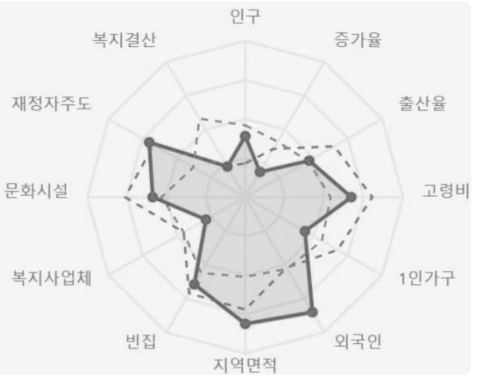
충남 공주시

고령비1인가구에서 높은 수치, 관심지역평균은 인구에서 높음.
증가율·출산율·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중간 수준.



충남 보령시

고령비1인가구에서 높은 수치, 관심지역평균은 인구에서 높음.
증가율·출산율·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중간 수준.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충남권

지역 특성 —감소 충남 논산시 · 금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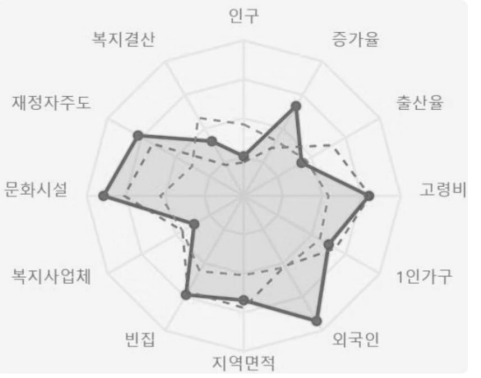
충남 논산시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에서 감소지역평균 대비 높은 수치.
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낮은 편.



충남 금산군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에서 감소지역평균 대비 높은 수치.
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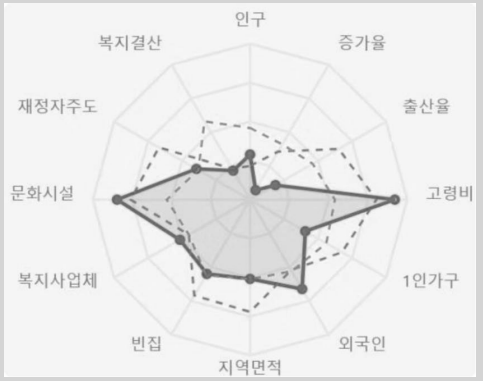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충남권

지역 특성 — 감소 충남 부여군 · 서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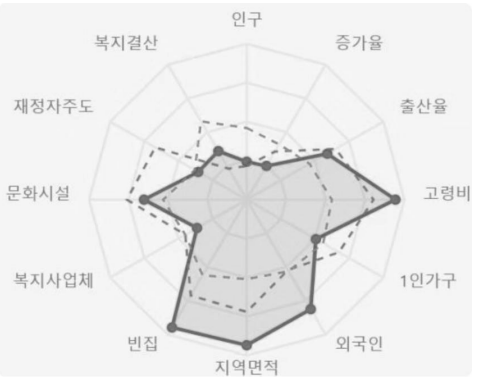
충남 부여군

고령비1인가구에서 높은 수치, 관심지역평균은 인구·증가율에서 높음.
출산율·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중간 수준.



충남 서천군

고령비1인가구에서 높은 수치, 관심지역평균은 인구·증가율에서 높음.
출산율·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중간 수준.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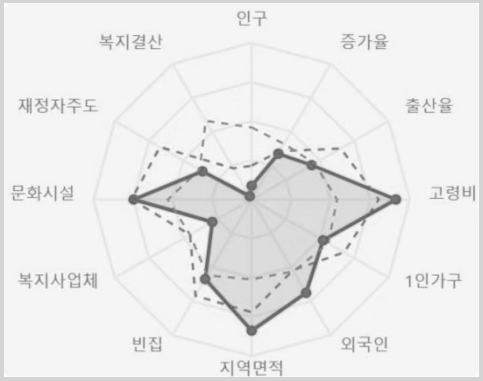
65

충남권

지역 특성 —감소 충남 청양군 · 예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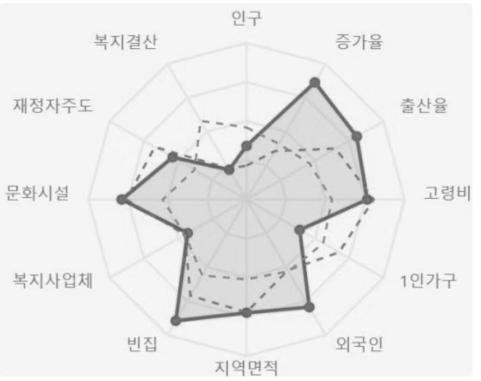
충남 청양군

고령비1인가구에서 높은 수치, 재정자주도는 감소지역평균이 높음.
인구·증가율·출산율·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복지결산은 낮은 편.



충남 예산군

증가율·출산율에서 높은 수치, 재정자주도는 감소지역평균이 높음.
인구·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복지결산은 낮은 편.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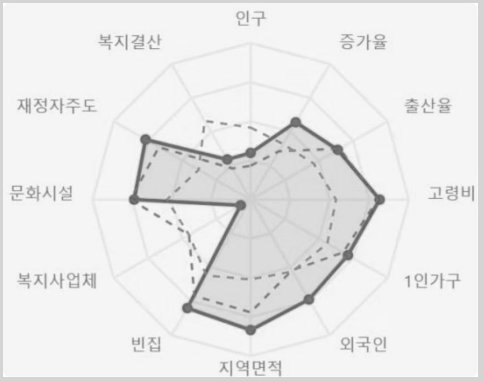
66

충남·전북권

지역 특성 — 감소 충남 태안군 · 전북 정읍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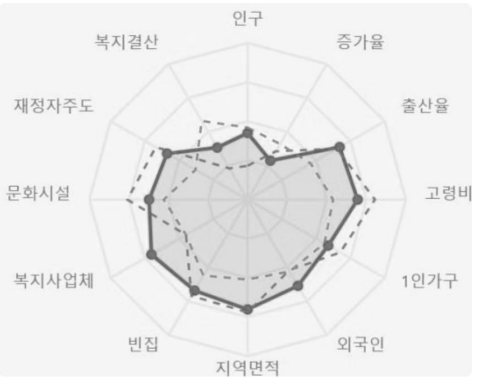
충남 태안군

고령비1인가구에서 특히 높은 수치(각 5.5, 5.0).
인구·증가율·출산율·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중간 수준(약 4.0).



전북 정읍시

고령비1인가구에서 특히 높은 수치(각 5.5, 5.0).
인구·증가율·출산율·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중간 수준(약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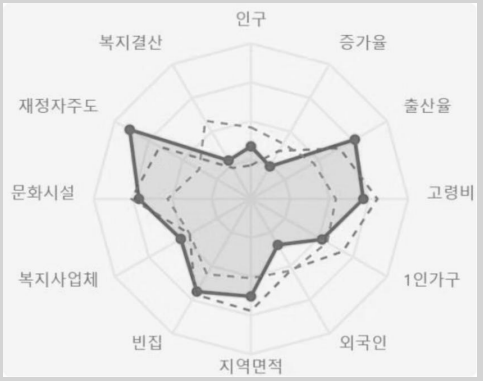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전북권

지역 특성 —감소 전북 남원시 · 김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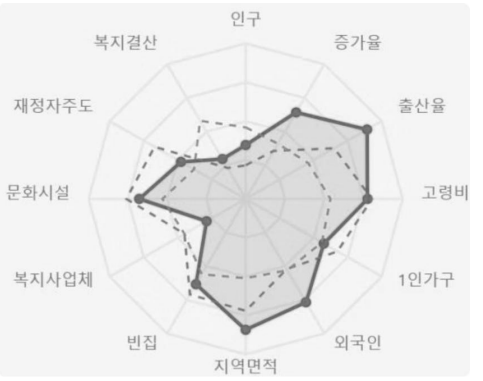
전북 남원시

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에서 높은 수치. 인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재정자주도는 중간 수준.
감소지역평균 대비 전반적 우위.



전북 김제시

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에서 높은 수치. 인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재정자주도는 중간 수준.
감소지역평균 대비 전반적 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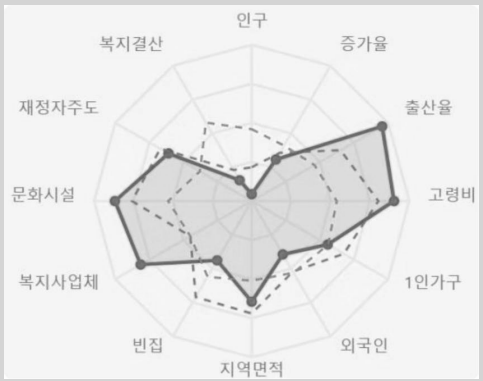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전북권

지역 특성 — 감소 전북 진안군 · 무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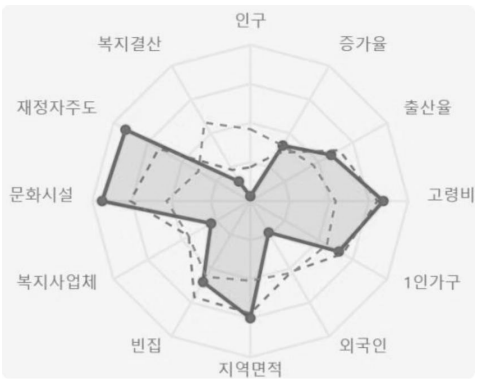
전북 진안군

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에서 높은 수치, 관심지역평균은 인구·증가율·복지사업체에서 높음,
지역면적·빈집·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낮은 편.



전북 무주군

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에서 높은 수치, 관심지역평균은 인구·증가율·복지사업체에서 높음,
지역면적·빈집·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낮은 편.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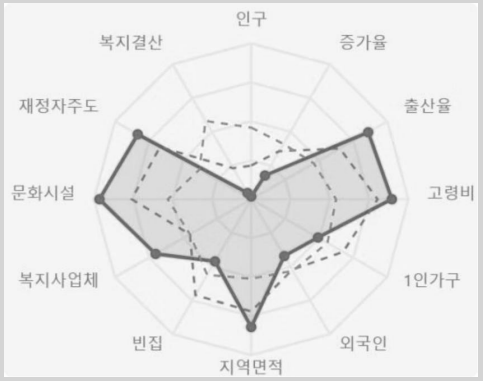
69

전북권

지역 특성 —감소 전북 장수군 · 임실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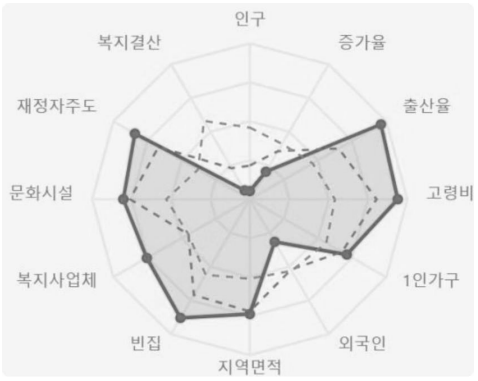
전북 장수군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복지결산
전반에서 감소지역평균·관심지역평균 대비 높은 수치.



전북 임실군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복지결산 전반에서
감소지역평균·관심지역평균 대비 높은 수치.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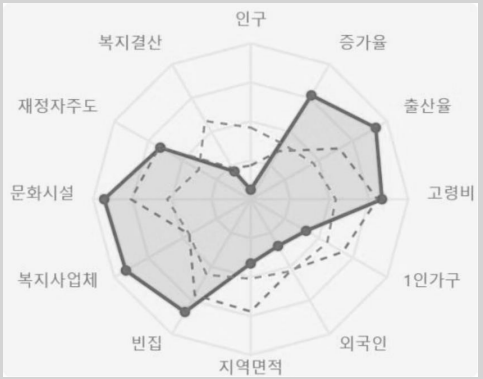
70

전북권

지역 특성 — 감소 전북 순창군 · 고창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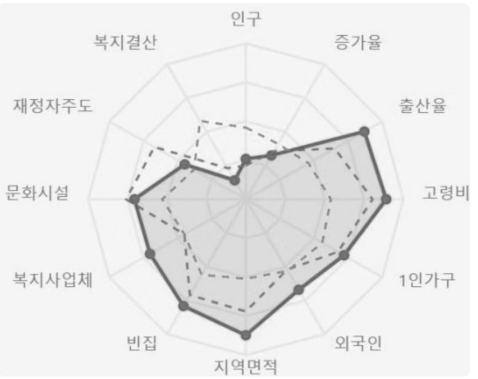
전북 순창군

증가율·출산율에서 높은 수치, 관심지역평균은 인구에서 높음.
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중간 수준.



전북 고창군

증가율·출산율에서 높은 수치, 관심지역평균은 인구에서 높음.
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중간 수준.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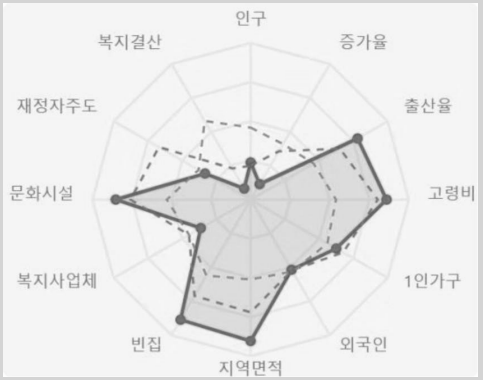
71

전북·전남권

지역 특성 —감소 전북 부안군 · 전남 담양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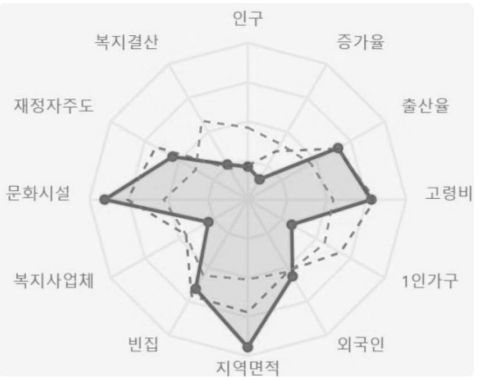
전북 부안군

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에서 높은 수치, 인구·재정자주도는 중간 수준.



전남 담양군

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에서 높은 수치, 인구·재정자주도는 중간 수준.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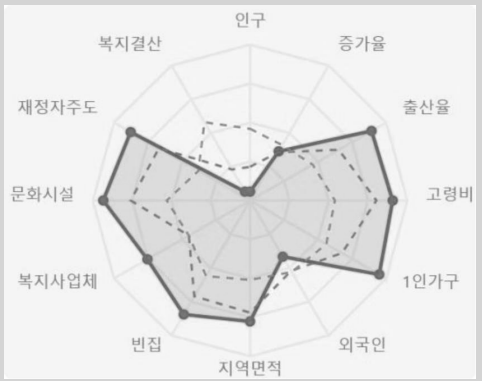
72

전남권

지역 특성 — 감소 전남 곡성군 · 구례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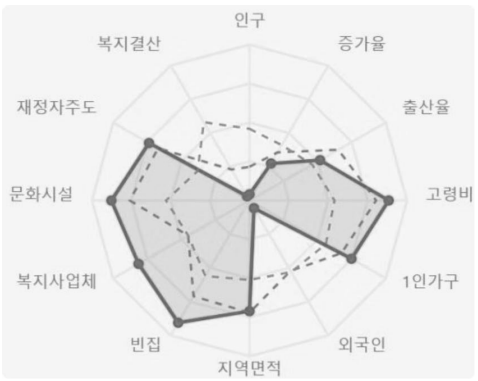
전남 곡성군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 전반에서 감소지역평균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



전남 구례군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 전반에서 감소지역평균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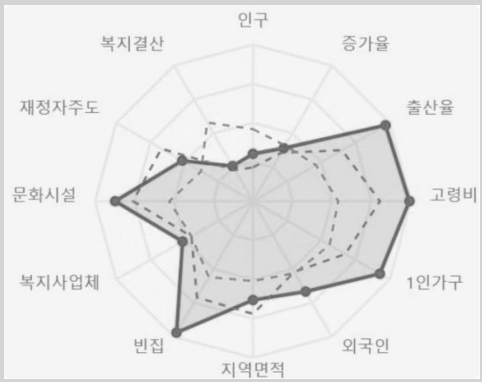
73

전남권

지역 특성 —감소 전남 고흥군 · 보성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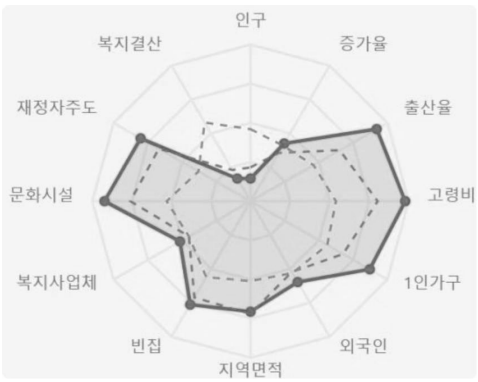
전남 고흥군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에서 높은 수치. 외국인·지역면적은 중간, 재정자주도·복지결산은 중간 수준.



전남 보성군

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에서 높은 수치. 인구·외국인·지역면적은 중간, 재정자주도·복지결산은 중간 수준.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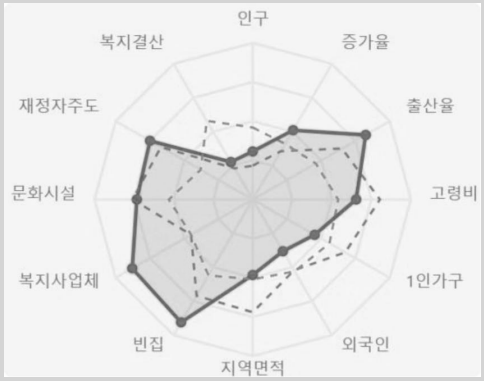
74

전남권

지역 특성 — 감소 전남 화순군 · 장흥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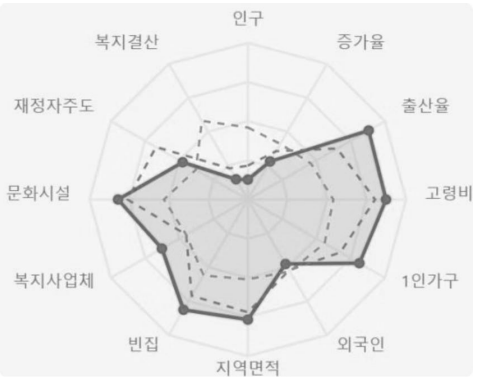
전남 화순군

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에서 높은 수치, 관심지역평균은 인구·증가율·복지사업체에서 높음.
지역면적·빈집·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낮은 편.



전남 장흥군

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에서 높은 수치, 관심지역평균은 인구·증가율·복지사업체에서 높음.
지역면적·빈집·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낮은 편.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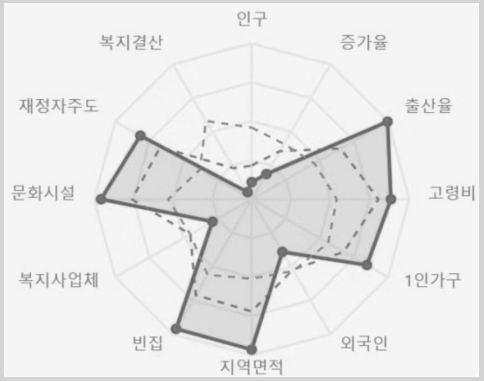
75

전남권

지역 특성 —감소 전남 강진군 · 해남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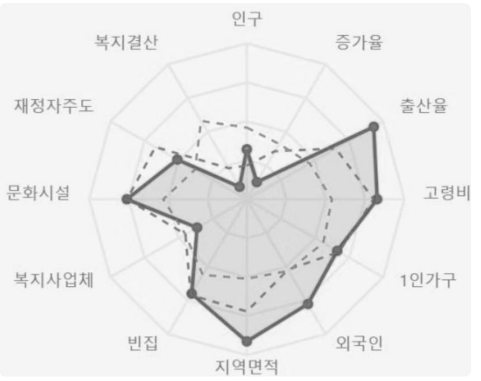
전남 강진군

출산율에서 매우 높은 수치, 인구·증가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복지결산 전반에서 감소지역평균 대비 높음.



전남 해남군

출산율에서 매우 높은 수치, 인구·증가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복지결산 전반에서 감소지역평균 대비 높음.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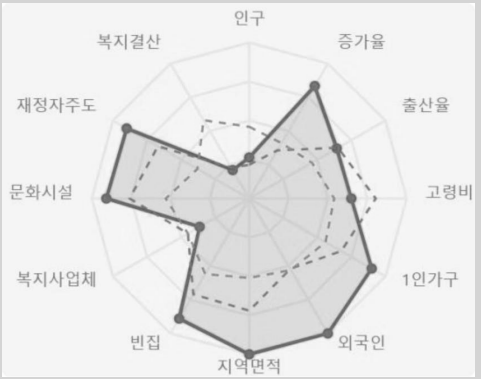
76

전남권

지역 특성 — 감소 전남 영암군 · 함평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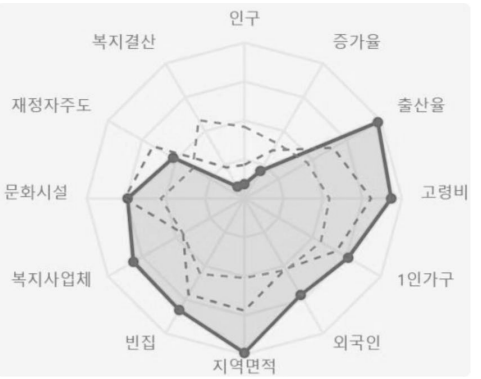
전남 영암군

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에서 높은 수치. 복지사업체·재정자주도는 감소지역평균이 높음. 인구·증가율은 중간 수준.



전남 함평군

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에서 높은 수치. 복지사업체·재정자주도는 감소지역평균이 높음. 인구·증가율은 중간 수준.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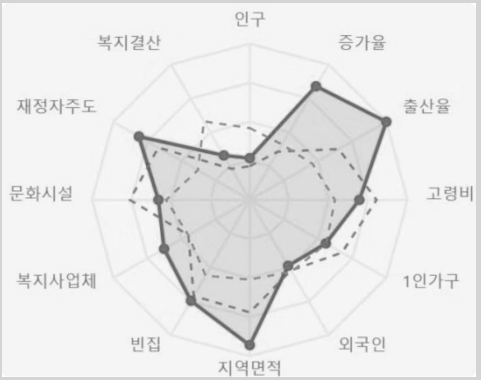
77

전남권

지역 특성 —감소 전남 영광군 · 장성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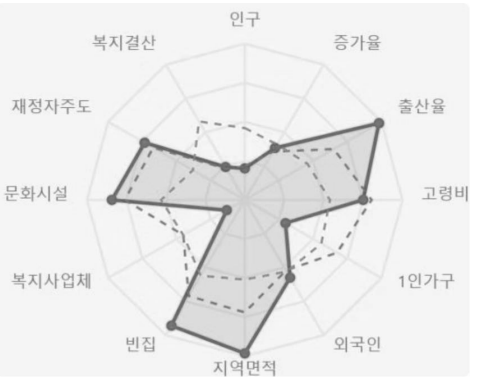
전남 영광군

인구·증가율·출산율·지역면적·빈집에서 높은 수치.
고령비·1인가구·외국인·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복지결산은 중간 수준.



전남 장성군

증가율·출산율·지역면적·빈집에서 높은 수치.
인구·고령비·1인가구·외국인·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복지결산은 중간 수준.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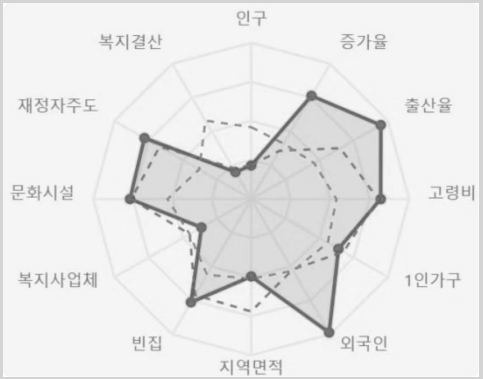
78

전남권

지역 특성 — 감소 전남 완도군 · 진도군

전남 완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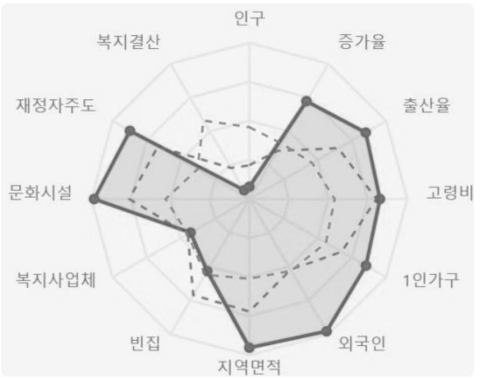
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에서 높은 수치, 관심지역평균은 인구·증가율에서 높음.
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중간 수준.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전남 진도군

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에서 높은 수치, 관심지역평균은 인구·증가율에서 높음.
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중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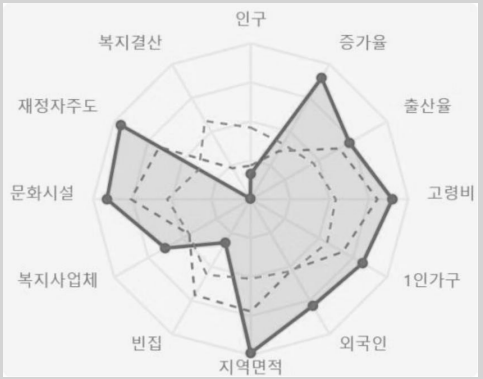
79

전남·경북권

지역 특성 —감소 전남 신안군 · 경북 안동시

전남 신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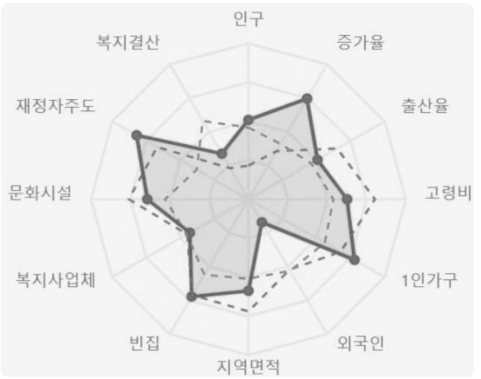
증가율·고령비에서 높은 수치, 관심지역평균은 인구·지역면적에서 높음.
출산율·1인가구·외국인·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복지결산은 중간 수준.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경북 안동시

증가율·고령비에서 높은 수치, 관심지역평균은 인구·지역면적에서 높음.
출산율·1인가구·외국인·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복지결산은 중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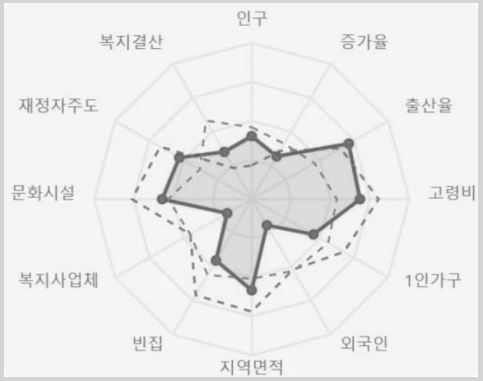
80

경북권

지역 특성 — 감소 경북 영주시 · 영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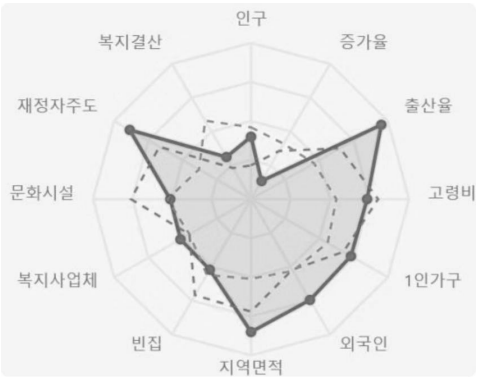
경북 영주시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 전반에서 감소지역평균 대비 높은 수치. 출산율·고령비·1인가구에서 특히 두드러짐.



경북 영천시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 전반에서 감소지역평균 대비 높은 수치. 출산율·고령비·1인가구에서 특히 두드러짐.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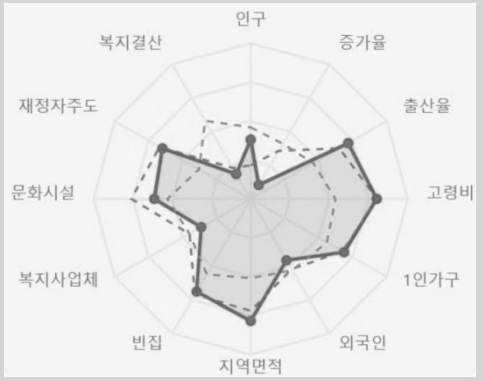
81

경북권

지역 특성 —감소 경북 상주시 · 문경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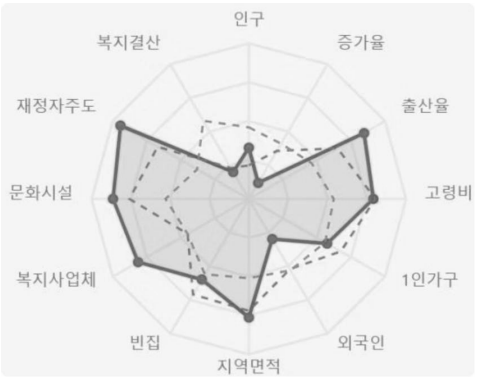
경북 상주시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복지결산 전반에서 감소지역평균 대비 높은 수치.



경북 문경시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복지결산 전반에서 감소지역평균 대비 높은 수치.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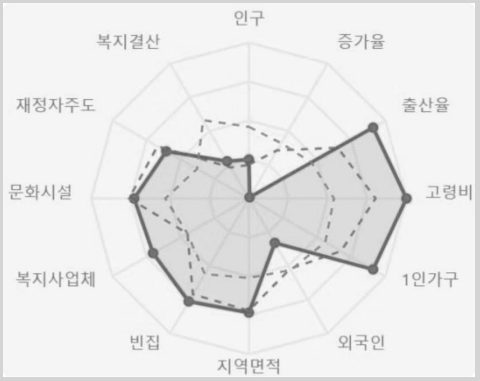
82

경북권

지역 특성 — 감소 경북 의성군 · 청송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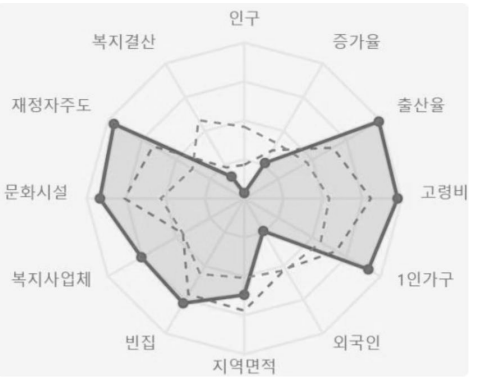
경북 의성군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복지결산 전반에서 감소지역평균 대비 높은 수치.



경북 청송군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복지결산 전반에서 감소지역평균 대비 높은 수치.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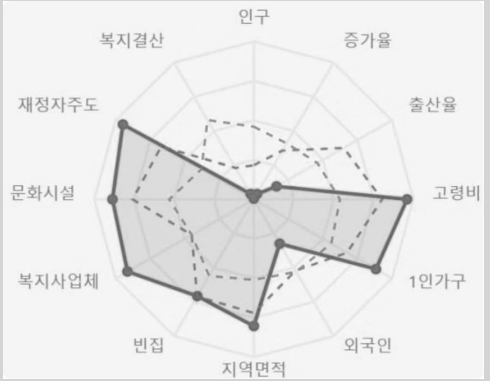
83

경북권

지역 특성 —감소 경북 영양군 · 영덕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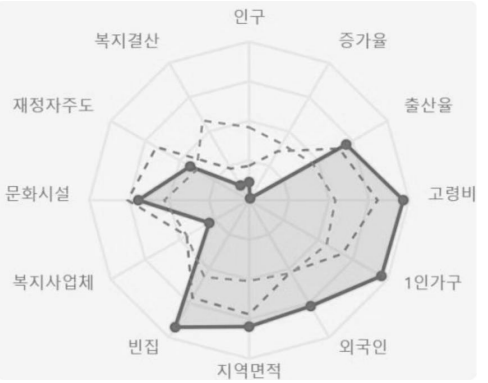
경북 영양군

고령비·1인가구에서 높은 수치. 인구·증가율·출산율·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중간 수준. 감소지역평균·관심지역평균 대비 고령화 특성 두드러짐.



경북 영덕군

고령비·1인가구에서 높은 수치. 인구·증가율·출산율·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중간 수준. 감소지역평균·관심지역평균 대비 고령화 특성 두드러짐.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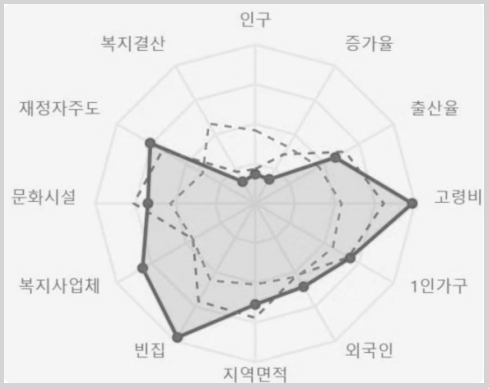
84

경북권

지역 특성 — 감소 경북 청도군 · 고령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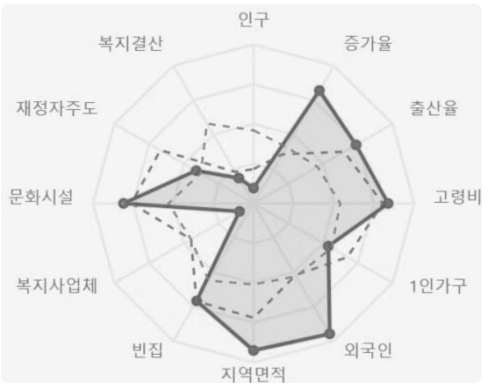
경북 청도군

고령비1인가구에서 매우 높은 수치, 인구·증가율·출산율·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복지결산 전반에서 감소지역평균 대비 높고, 관심지역평균 대비 낮음.



경북 고령군

고령비1인가구에서 매우 높은 수치, 인구·증가율·출산율·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복지결산 전반에서 감소지역평균 대비 높고, 관심지역평균 대비 낮음.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85

경북권

지역 특성 —감소 경북 성주군 · 봉화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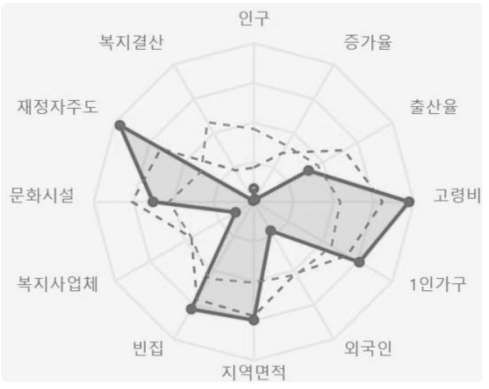
경북 성주군

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에서 높은 수치, 관심지역평균은 인구에서 높음.
증가율·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낮은 편.



경북 봉화군

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에서 높은 수치, 관심지역평균은 인구에서 높음.
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은 낮은 편.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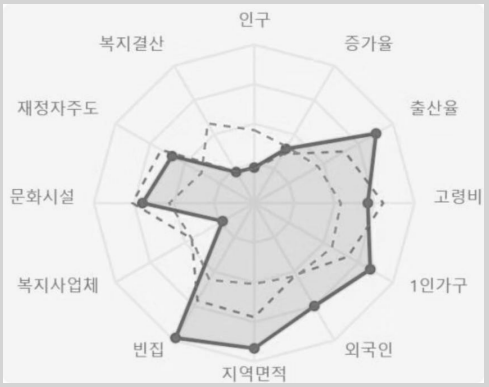
86

경북권

지역 특성 — 감소 경북 울진군 · 울릉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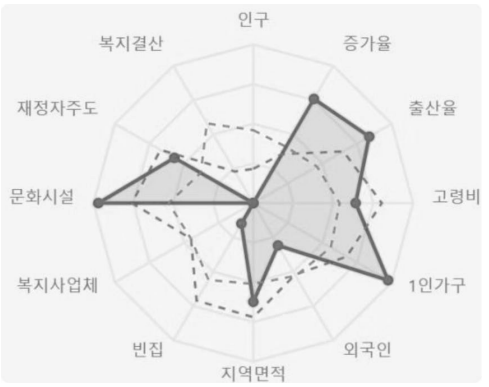
경북 울진군

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에서 높은 수치. 인구·증가율·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낮은 편. 고령화 및 외국인 비율이 두드러지는 지역.



경북 울릉군

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에서 높은 수치. 인구·증가율·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낮은 편. 고령화 및 외국인 비율이 두드러지는 지역.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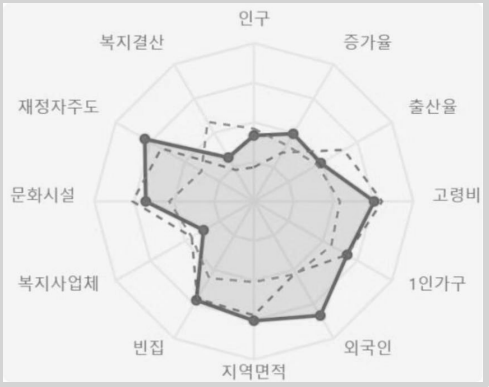
87

경남권

지역 특성 —감소 경남 밀양시 · 의령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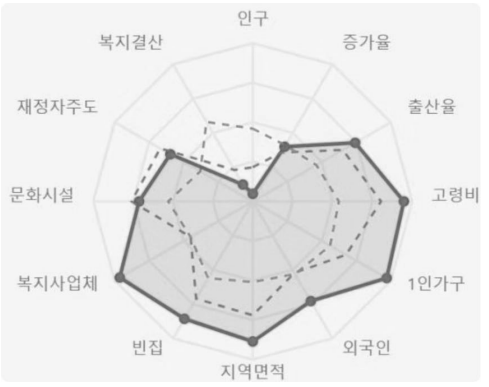
경남 밀양시

고령비·1인가구·외국인에서 높은 수치. 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감소지역평균이 높음.
인구·증가율·출산율·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는 중간 수준.



경남 의령군

고령비·1인가구·외국인에서 높은 수치. 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감소지역평균이 높음.
인구·증가율·출산율·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는 중간 수준.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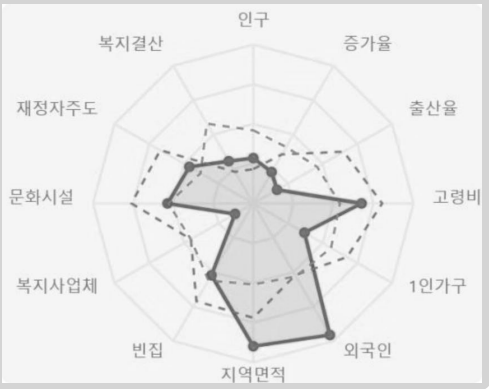
88

경남권

지역 특성 — 감소 경남 함안군 · 창녕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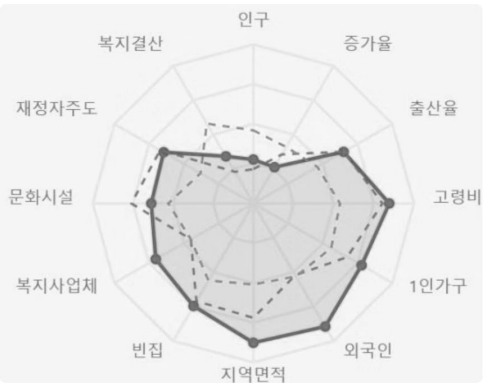
경남 함안군

고령비4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에서 높은 수치(해당지역·감소지역평균·관심지역평균 모두 높음).
인구·증가율·출산율·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낮은 편.



경남 창녕군

고령비4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에서 높은 수치(해당지역·감소지역평균·관심지역평균 모두 높음).
인구·증가율·출산율·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낮은 편.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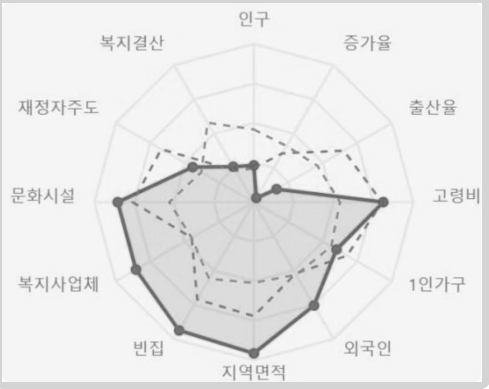
89

경남권

지역 특성 —감소 경남 고성군 · 남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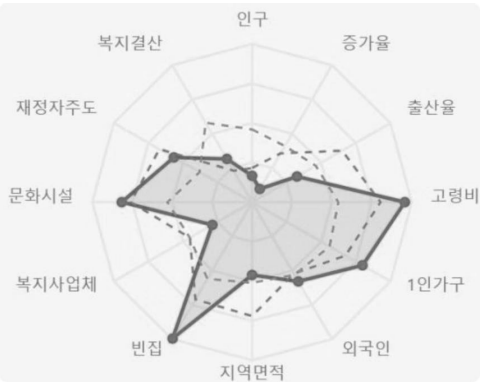
경남 고성군

고령비4인가구에서 높은 수치. 관심지역평균은 출산율·재정자주도에서 높음.
인구·증가율·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는 낮은 편.



경남 남해군

고령비4인가구에서 높은 수치. 관심지역평균은 출산율·재정자주도에서 높음.
인구·증가율·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는 낮은 편.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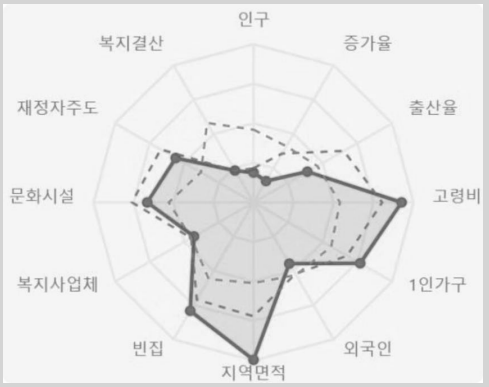
90

경남권

지역 특성 — 감소 경남 하동군 · 산청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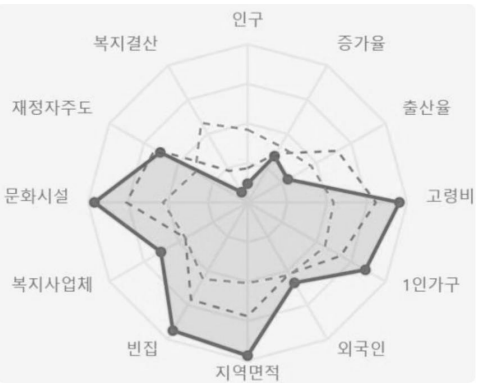
경남 하동군

고령비·1인가구에서 높은 수치, 인구·증가율·출산율·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낮은 편, 감소지역평균·관심지역평균 대비 고령화 특성 두드러짐.



경남 산청군

고령비·1인가구에서 높은 수치, 인구·증가율·출산율·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낮은 편, 감소지역평균·관심지역평균 대비 고령화 특성 두드러짐.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91

경남권

지역 특성 —감소 경남 함양군 · 거창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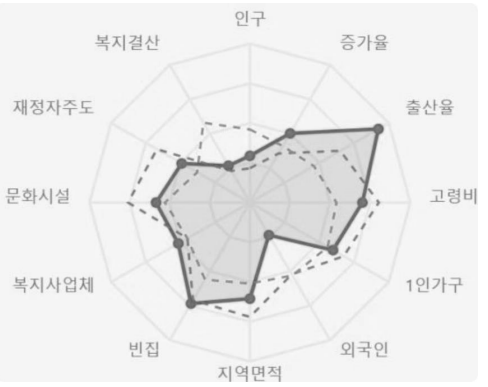
경남 함양군

고령비에서 높은 수치(4.5), 인구·증가율·출산율·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복지결산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중간 수준(약 4.0).



경남 거창군

고령비에서 높은 수치(4.5), 인구·증가율·출산율·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복지결산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중간 수준(약 4.0).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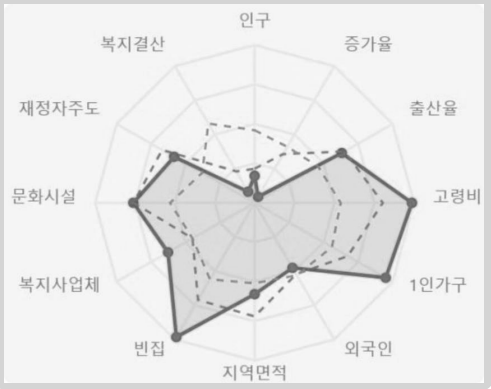
92

경남·부산권

지역 특성 — 감소 경남 합천군 · 관심 부산 중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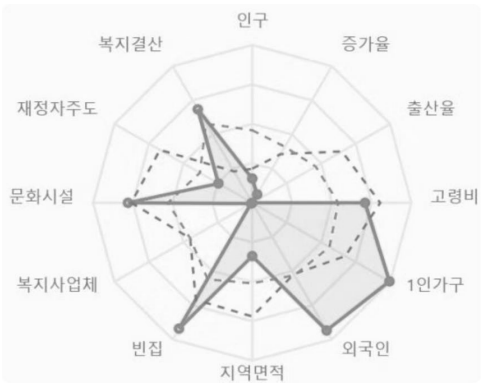
경남 합천군 (감소)

고령비·1인가구·빈집에서 높은 수치.
인구·증가율·출산율·외국인·지역면적·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복지결산은 중간 수준.



부산 중구 (관심)

1인가구·빈집에서 높은 수치.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외국인·지역면적·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복지결산은 중간 수준.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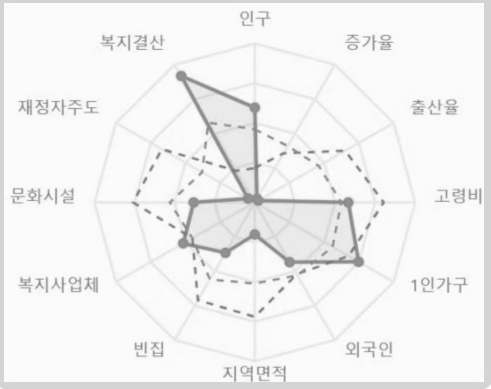
93

부산·인천권

지역 특성 —관심 부산 금정구 · 인천 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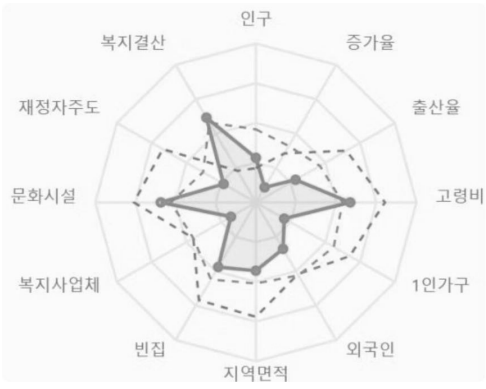
부산 금정구 (관심)

인구·증가율에서 높은 수치, 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낮은 편, 감소지역평균·관심지역평균 대비 인구 지표 우위.



인천 동구 (관심)

인구·증가율에서 높은 수치, 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낮은 편, 감소지역평균·관심지역평균 대비 인구 지표 우위.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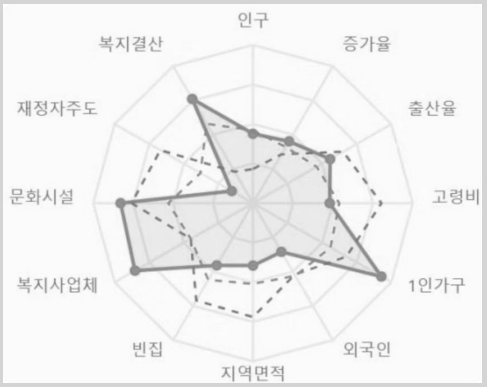
94

광주·대전권

지역 특성 — 관심 광주 동구 · 대전 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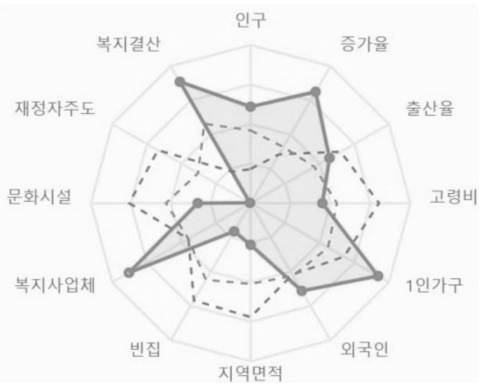
광주 동구 (관심)

인구·증가율·1인가구에서 높은 수치. 관심지역평균도 인구·증가율에서 높음.
출산율·고령비·외국인·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중간, 지역면적·빈집은 낮음.



대전 동구 (관심)

인구·증가율·1인가구에서 높은 수치. 관심지역평균도 인구·증가율에서 높음.
출산율·고령비·외국인·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중간, 지역면적·빈집은 낮음.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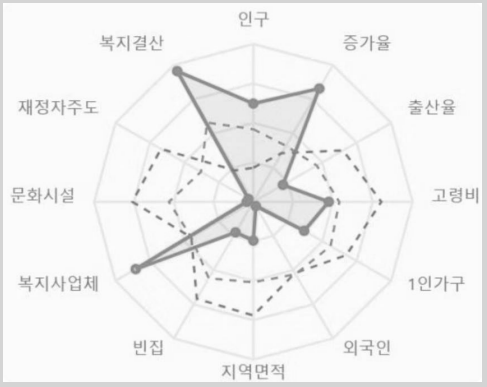
95

대전권

지역 특성 —관심 대전 중구 · 대덕구

대전 중구 (관심)

인구·증가율·출산율·복지사업체에서 높은 수치. 감소지역평균은 1인가구·외국인에서 높음.
고령비·지역면적·빈집·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중간 수준.



대전 대덕구 (관심)

인구·증가율·출산율·복지사업체에서 높은 수치. 감소지역평균은 1인가구·외국인에서 높음.
고령비·지역면적·빈집·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중간 수준.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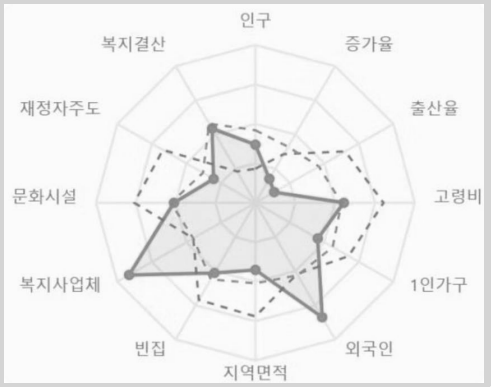
96

경기권

지역 특성 — 관심 경기 동두천시 · 포천시

경기 동두천시 (관심)

1인가구·복지사업체에서 높은 수치. 관심지역평균은 증가율·출산율에서 높음.
인구·고령비·외국인·지역면적·빈집·재정자주도는 낮은 편.



경기 포천시 (관심)

증가율·출산율에서 높은 수치. 감소지역평균은 1인가구에서 높고, 관심지역평균은 복지사업체에서 높음.
인구·고령비·외국인·지역면적·빈집·재정자주도는 낮은 편.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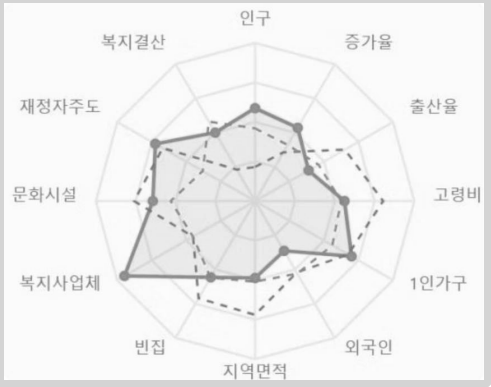
97

경기권

지역 특성 —관심 강원 강릉시 · 동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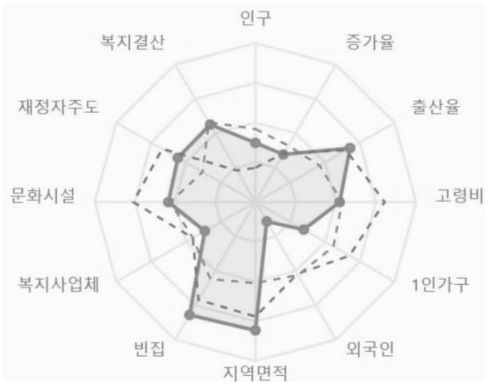
강원 강릉시 (관심)

인구(8점)·증가율(7점)에서 감소지역평균(6점) 대비 높은 수치.
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복지결산은 중간 수준(6점).



강원 동해시 (관심)

인구(8점)·증가율(7점)에서 감소지역평균(6점) 대비 높은 수치.
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복지결산은 중간 수준(6점).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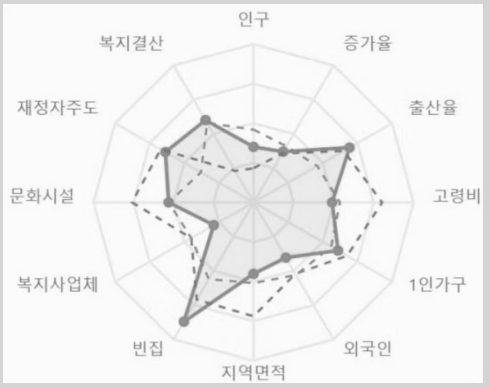
98

강원권

지역 특성 — 관심 강원 속초시 · 인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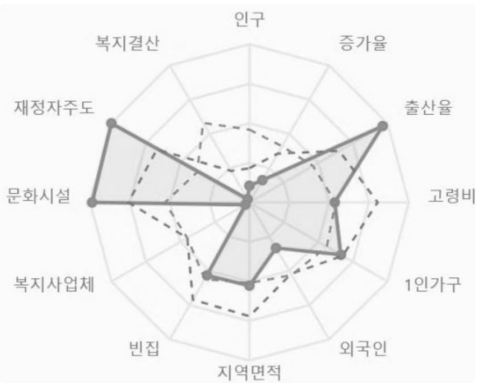
강원 속초시 (관심)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 전반에서 감소지역평균 대비 높은 수치. 재정자주도·문화시설·복지사업체에서 특히 우위.



강원 인제군 (관심)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 전반에서 감소지역평균 대비 높은 수치. 재정자주도·문화시설·복지사업체에서 특히 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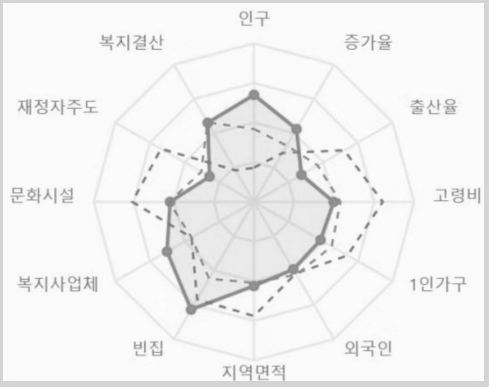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전북·경북권

지역 특성 —관심 전북 익산시 · 경북 경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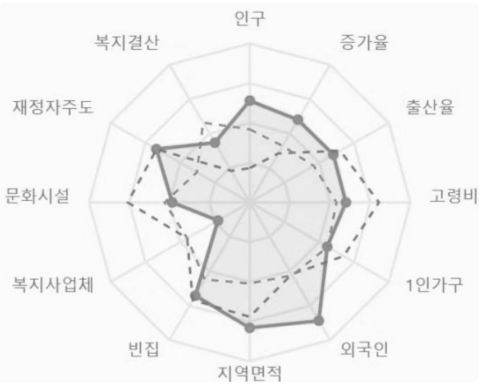
전북 익산시 (관심)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복지결산 전반에서 감소지역평균 대비 높은 수치. 인구·출산율·고령비에서 특히 두드러짐.



경북 경주시 (관심)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복지결산 전반에서 감소지역평균 대비 높은 수치. 인구·출산율·고령비에서 특히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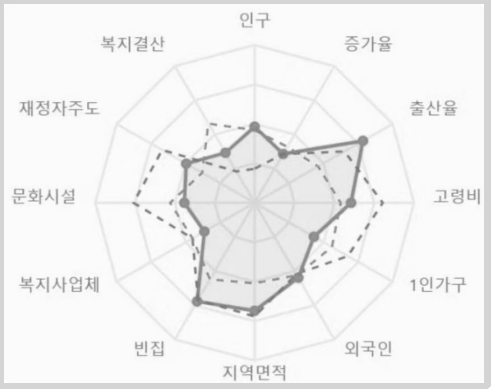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경북·경남권

지역 특성 — 관심 경북 김천시 · 경남 통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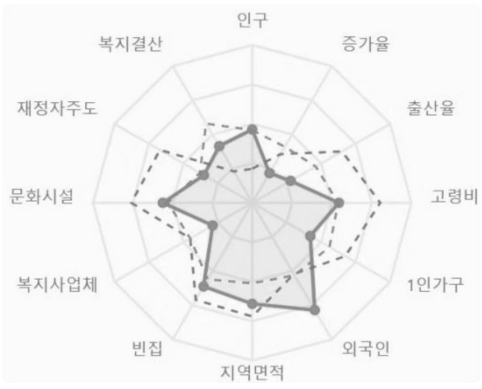
경북 김천시 (관심)

인구·증가율에서 높은 수치, 출산율·고령비는 관심지역평균이 높음.
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중간 수준.



경남 통영시 (관심)

인구·증가율에서 높은 수치, 출산율·고령비는 관심지역평균이 높음.
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는 중간 수준.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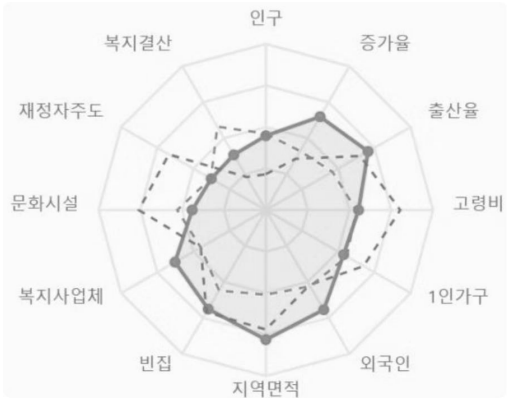
101

경남권

지역 특성 — 관심 경남 사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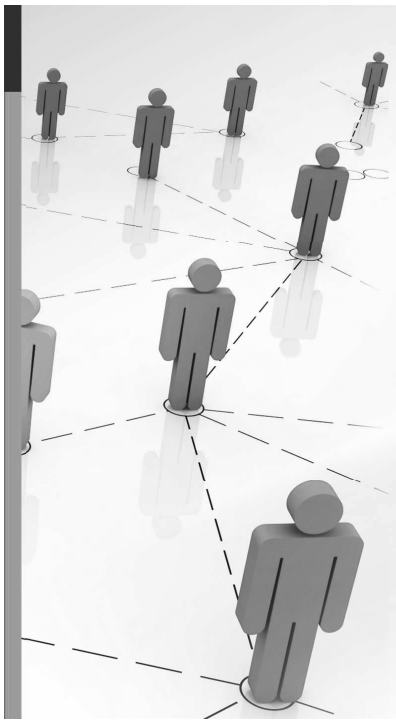
경남 사천시 (관심)

관심지역평균은 인구·증가율·출산율·고령비에서 높은 수치, 해당지역 및 감소지역평균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 1인가구·외국인·지역면적·빈집·복지사업체·문화시설·재정자주도·복지결산은 낮은 수준.



— 해당지역 — 감소지역평균 — 관심지역평균

102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가족서비스 전략 포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 지자체 지원제도의 방향성

2026. 8.27, 서울지방조달청, 서울
장인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목 차

01 우리나라의 지역 인구 변동 주요 특성

02 주요 정책 대응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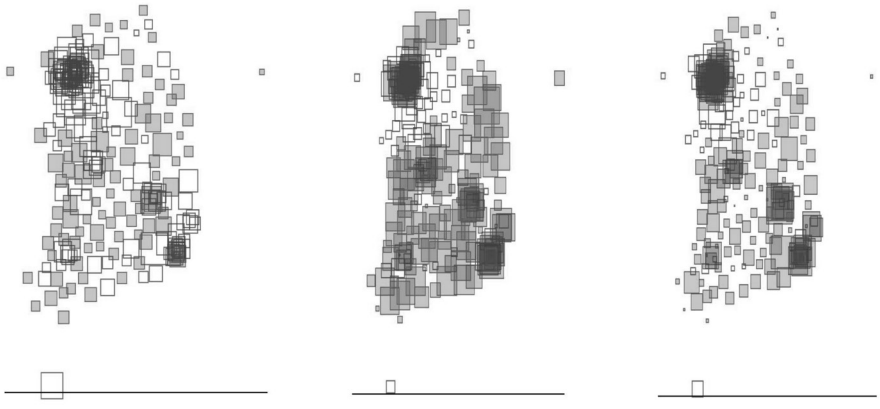
03 향후 대응 방향



01 우리나라의 지역 인구 변동 주요 특성

인구감소지역 인구변동의 주요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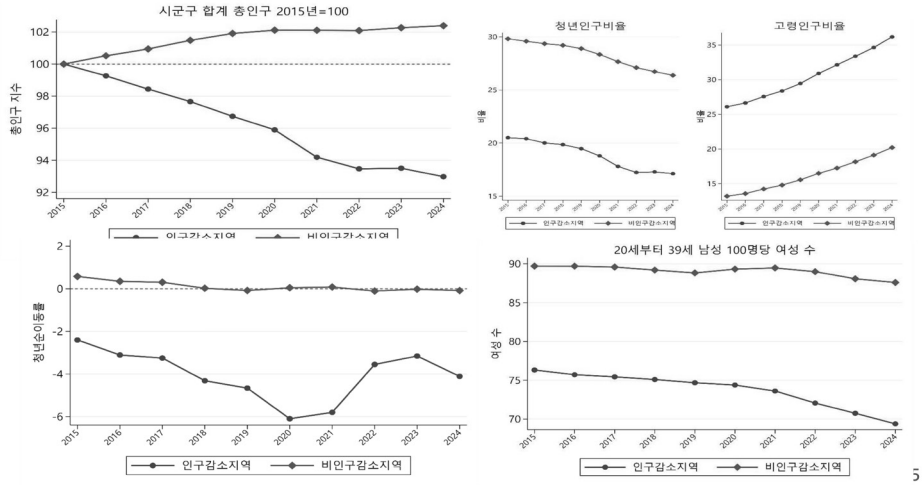
-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시군구별 인구 규모(2024년 기준), 인구 변화(2015-2024년)의 공간적 분포: 수도권-비수도권 간 차이 특성과 유사한 경향
  - 붉은색 지역: 인구감소지역(네모 크기는 인구 규모, 인구 변화율 절대규모 크기, 변화분 크기를 반영)



4

인구감소지역 인구변동의 주요 특성

➢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 인구 규모 및 인구 구조 변화의 차이(2015-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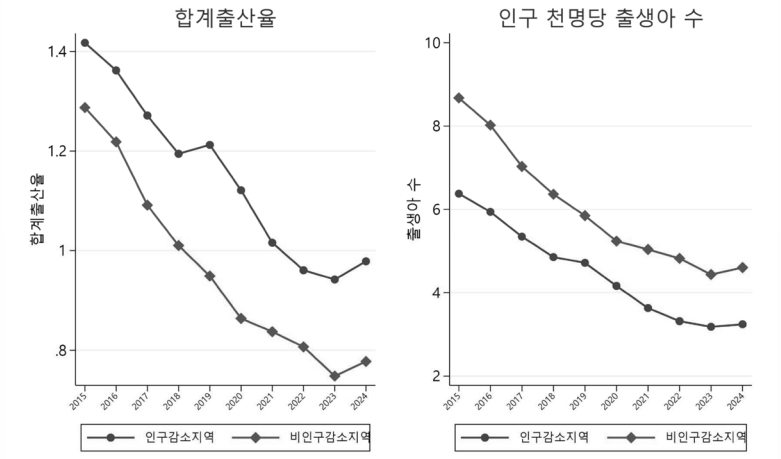


5

인구감소지역 인구변동의 주요 특성

➢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 출산 관련 집계지표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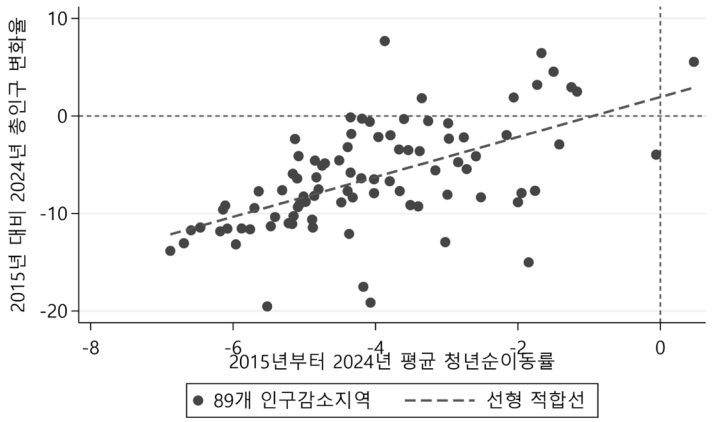
- 지역의 출산력과 단위 인구 당 출생아 수(조출생률)의 차이: 높은 합계출산율이 더 많은 출생아 수를 의미하지 않음.



6

인구감소지역 인구변동의 주요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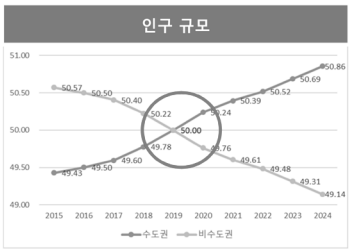
➢ 인구감소지역의 2015-2024년 평균 청년순이동률과 총인구 변화율 간 연관성
- 3사분면에 많은 지역 분포: 두 변인(x, y) 모두 부적(-)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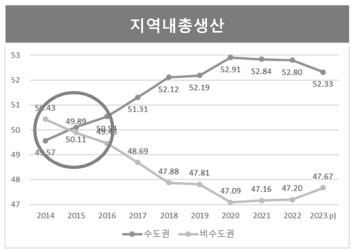


7

지역 인구 변동과 지역 간 격차 심화 현안

➢ 주요 현안 검토
-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인구 감소(청년층 유출, 인구 고령화 심화)로 인한 지역 간 격차 확대
- 지방 중소도시·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험, 지역경제·공공서비스 유지에 난항
-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의 인력 감소, 혁신역량 및 지역경제 활력 약화
- 수도권-비수도권 간 인구 규모,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각각 2019년, 2015년부터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하면서 점차 심화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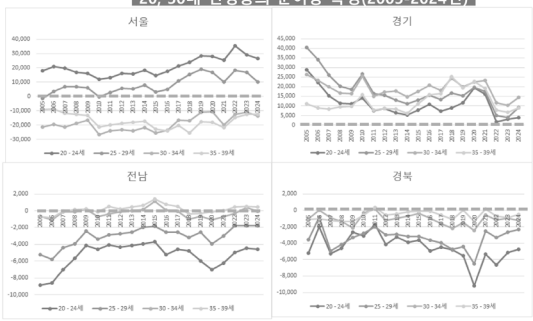
주: 지역내총생산 2023년 수치는 추정치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국가데이터처. 지역소득

8

지역 인구 변동과 지역 간 격차 심화 현안

- 주요 현안 검토(계속)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20, 30대 청년층 순이동인구 추세는 순유입-순유출 특성이 명확하게 관측
  - 5세 단위 연령대별 순이동 특성을 약 20여년 간 살펴본 결과,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은 공통적으로 20대 연령층의 순유출 특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서울, 경기, 전남, 경북의
20, 30대 연령층의 순이동 특성(2005-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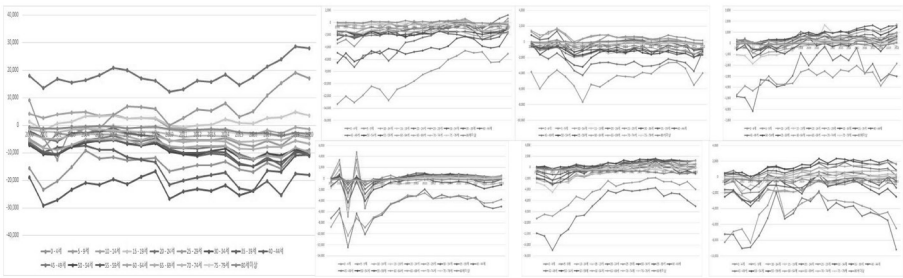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국내인구이동통계)

9

지역 인구 변화 주요 특성: 연령대별 사회적 변화 차이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연령대별 사회적 변화의 차이
  - 같은 인구 감소 지역이라도, 서울과 비수도권의 연령대별 사회적 변화의 양상은 큰 차이를 보임. 즉, 서울(7.33% 감소)은 20대 연령층의 순유입 규모가 큰 반면, 부산(11.57% 감소)/대구(4.17% 감소)/강원(1.74% 감소)/전북(10.20% 감소)/전남(13.77% 감소)/경북(5.96% 감소)은 20대 연령층의 순유출 규모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큰 특성이 관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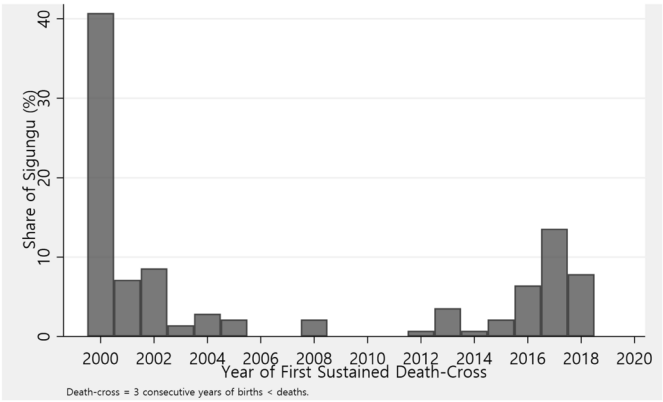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0

지역 인구의 자연적 감소 시작 시점

- 228개 시군구 중 상당수(약 40% 이상)가 이미 2000년 관측 시작 시점에 지속적 자연감소(3년 연속 출생아 수 < 사망자 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88개 지역은 2020년까지 지속적 자연감소가 나타나지 않음.

→ 지역 인구 감소 대응에 대한 중앙정부의 본격적 대응 시기가 과연 어떠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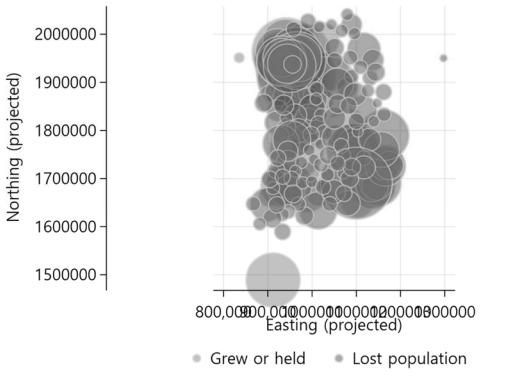


11

지역 인구 규모 변화의 분포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2000-2020년 간 지역 인구 규모 변화의 방향과 크기가 명확하게 대비되는 경향: 인구감소의 뚜렷한 공간적 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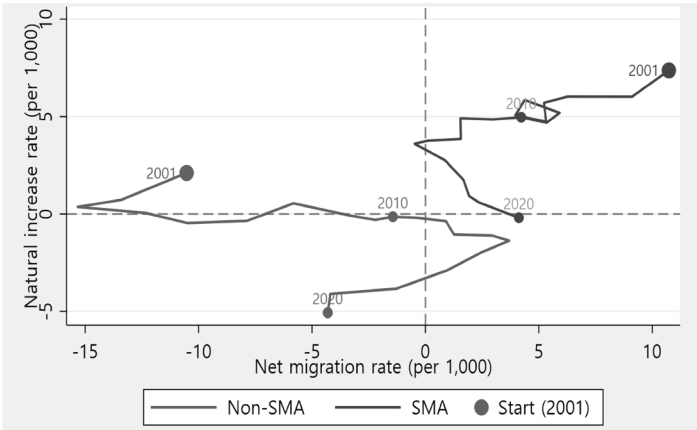
  - 원의 크기는 2020년 기준 인구 규모, 파란색 지역은 인구 규모가 유지/증가 지역, 붉은색 지역은 인구가 감소한 지역을 각각 의미



12

최근 20년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균적 인구 변동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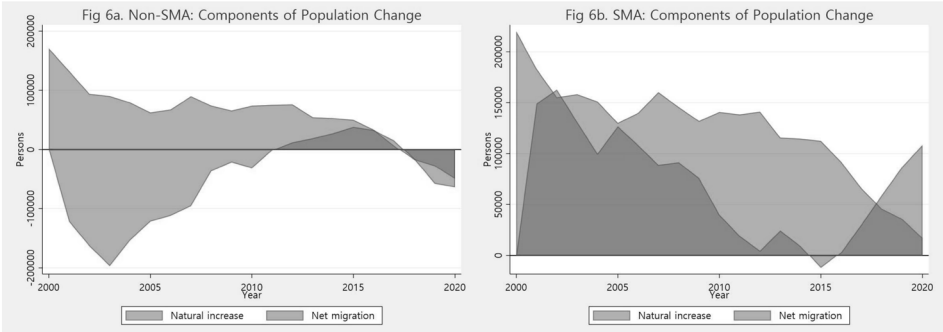
-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자연적 증가가 뚜렷한 상황에서 사회적 증가만 존재하는 상황(자연적 증가는 없어짐)으로 변화한 반면,
  비수도권은 자연적 증가 및 사회적 감소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자연적/사회적 감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으로 변화



13

최근 20년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균적 인구 변동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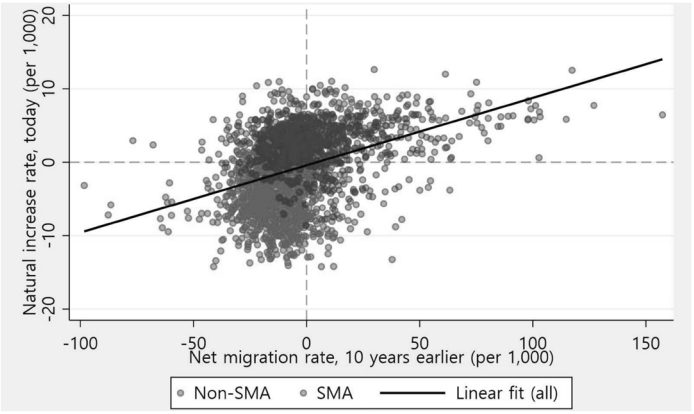
- 비수도권은 2000년대 초반 인구의 사회적 감소가 지역 인구감소를 견인, 이후 자연적 증가도 감소로 전환되어 2010년대 후반에는 자연감소와 순유출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로 변화
  수도권은 자연증가 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증가가 인구감소분을 상당 부분 상쇄, 2015년 이후 사회적 증가가 급격하게 증가



14

최근 20년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균적 인구 변동의 차이

- 비수도권은 과거(10년 전) 순유출과 현재 자연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관측치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
  - 과거의 사회적 감소가 현재의 자연적 감소를 견인하는 일련의 인과적 연관성을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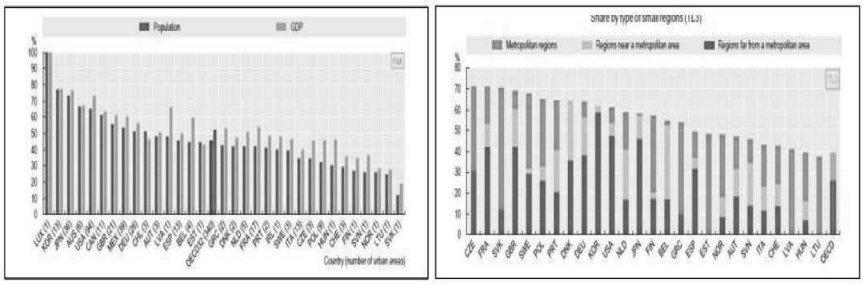


15

지역 간 격차 심화, 고착화

- 우리나라의 대도시권 집중화 양상의 고착화(심화) 특성은 전세계적으로도 결코 낮지 않은 수준
  - 2018년 기준 특광역시 지역(인구 50만 이상의 기능도시권역(functional urban area, OECD, 2020))의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음
  - 지역 생산성 수준이 국가 전체 평균 생산성 수준에 비하여 낮은 지역이 농촌인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우리나라는 전국 평균 생산성 수준보다 낮은 지역은 거의 대부분 특광역시 지역으로부터 먼 농촌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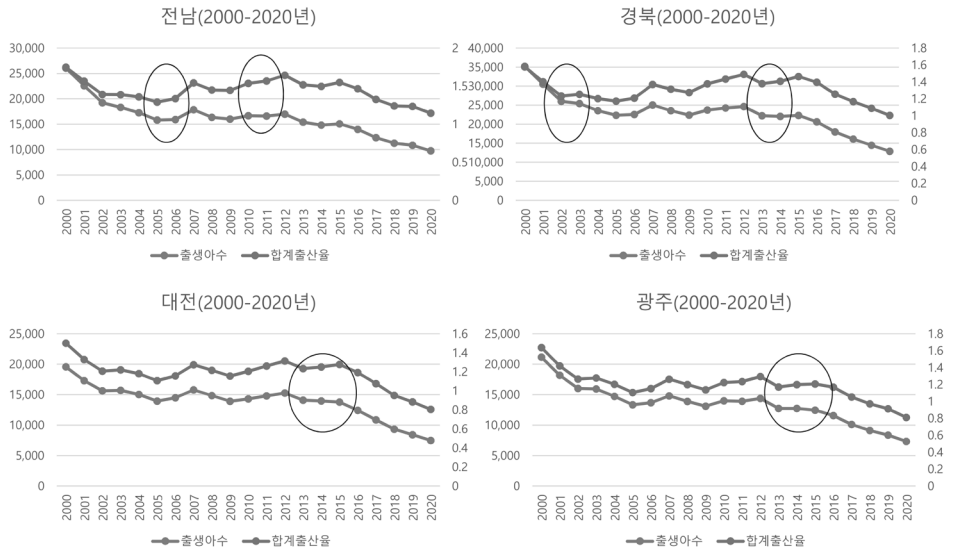
  → 지역 간 격차 완화에 주목하는 지역 인구 위기 대응 방안 필요!



자료: OECD

16

저출산 정책 평가 시 활용하는 집계자료별 상이한 특성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7

청년 이동에 따른 인구 변화 특성 지표 상이

- 합계출산율의 정의

  :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

  → 출산할 수 있는 여성(가임여성*, 인구학적 정의) 중 실제 출산을 한 경우를 고려

- 합계출산율(단위: 15-49세 여성 1명 당 (출생아) 명)의 산식

$$\sum \frac{\text{해당 연도 출생아 수}}{\text{해당 연도 (해당 국가(지역)의 } 15-49\text{세 여성 수}}$$

- 합계출산율 변화와 출생아 수 변화가 상이한 경우

  : 출생아 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 산식에서 분모의 감소가 분자의 감소보다 클 경우 합계출산율은 증가

  예) 2022년도 A지역의 출생아 수 100명, 15-49세 여성 수 100명(합계출산율 1.0명)

  2023년도 A지역의 출생아 수 80명, 15-49세 여성 수 50명(합계출산율 1.3명)

  → 인구감소지역의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

18

자체적인 재원 조달 능력 저하 및 정책 추진 여건 악화

-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X100(%))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역량
-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2025년 기준 세입과목 개편 후(세입과목 개편(잉여금, 이월금, 예탁·예수금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시군구 재정자립도를 살펴본 결과,
- 상위 30개 지역 중 26개 지역이 수도권 지역, 재정자립도 10 미만인 45개 지역은 모두 비수도권 지역이며, 이 중 42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1개 지역이 관심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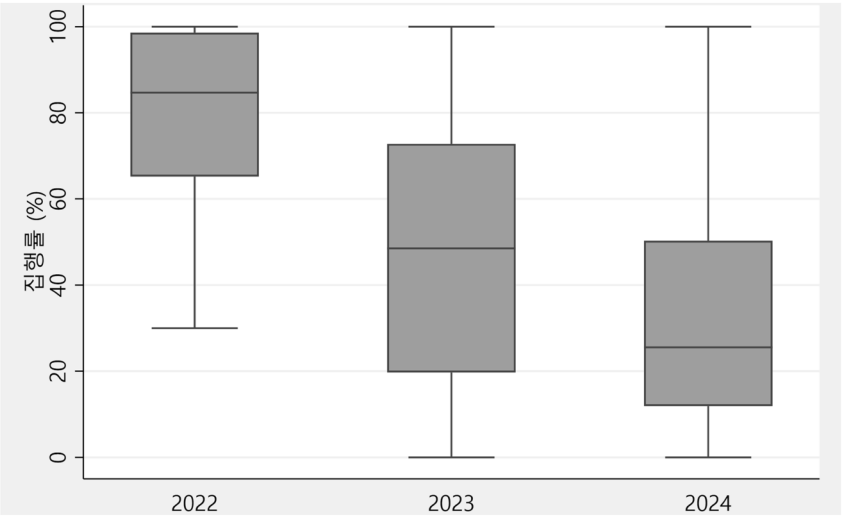
자체적인 재원 조달 능력 저하 및 정책 추진 여건 악화(계속)

-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전문인력 부족과 예산 축소로 사업 기획 및 집행력이 악화되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음.
-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7477억 원 배분 금액 중 2023년 12월 현재 집행금액은 3,935억 원으로 집행률 52.63%이며, 광역에 비하여 기초지자체의 집행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송윤경, 2024,4.24)
- 구체적으로, 광역지자체는 2022년 1,871억 배분 금액 중 2023년까지 1,829억 원이 집행된 데 비해, 기초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집행률 37.6%, 관심지역 29.94%인 것으로 나타남(송윤경, 2024,4.24).
- 이는 지자체 인구 문제 대응을 비롯한 사업 추진 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 등의 개선 필요성 시사

20

자체적인 재원 조달 능력 저하 및 정책 추진 여건 악화(계속)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연도별 기금 집행률 변화(2022-2024년)



21



02 주요 정책 대응 경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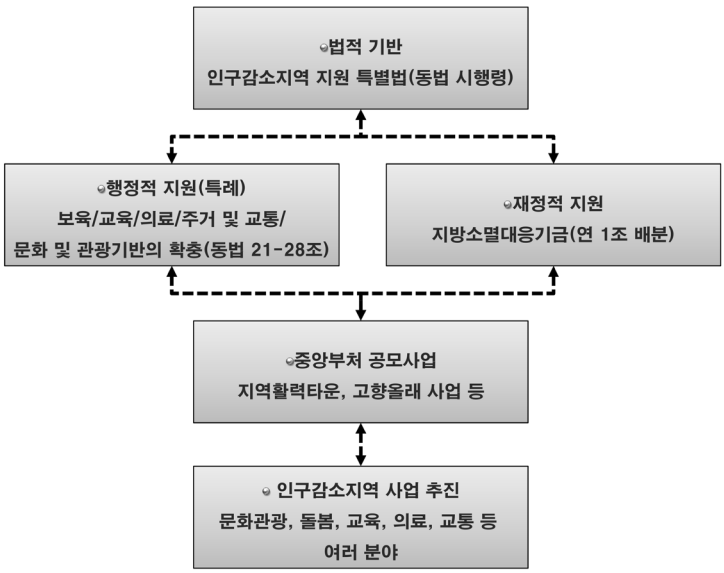
- 2021년 89개 지역(시군구 단위)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후 18개 지역 관심지역으로 추가 지정): 중앙정부의 본격적 지역 인구 감소 대응 정책으로서 분명한 의미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중심으로 행정적, 재정적 측면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체계 구축

  -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이 각각 지역 여건에 맞는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
  - 생활인구 확대, 청년과 중장년 정착, 보육,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화 기반 확충 등 명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를 자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 지역 인구감소 대응 정책은 지역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견지하고 있음.

23

지역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기본 구조



24

지방소멸대응기금 개관

-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난 2022년부터 향후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
-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2-'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
  -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이 각각 배분(행정안전부)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로 지역 인구 위기 및 사회경제적 저하에 따른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의 성격
- 다만, 정교하게 구성된 운용 방식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 및 여러 방면에서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 존재

25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 확대

- 2025년부터 투자계획 평가와 성과분석 결과를 향후 배분에 반영하는 성과 중심 운영을 강화하였고, 2026년에는 시설 조성에 국한되지 않는 인구 유입 중심의 기금 활용을 강조(행정안전부)

  - 주민 이용, 지역 정착, 서비스 개선과 연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음.

- 시설의 신규 건립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 수급 운영 및 이용률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에 주목할 필요성 시사

26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사업 개관

- 두 지역 살아보기(두 지역 살이)
  (의미) 도시 거주자가 정기적, 반복적인 지역 체류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과 교류하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는 것
  (방식) 도시 거주자의 다른 지역 거주 목적은 여가, 휴양, 체험 등으로 이에 대한 거주 지원, 체험 프로그램, 주민 교류 등으로 운영

- 워케이션(workation)
  (의미)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양을 동시에 즐기는 방식
  (방식) 기업 워케이션 참여자가 근무할 오피스 시설을 조성하고, 여유시간에 참여 가능한 지역 특화체험 프로그램 마련·제공

- 로컬유학(생활 인프라 조성)
  (목적)로컬 유학생 및 가족의 지역정착에 가장 필요한 주거시설 및 공용공간을 포함한 생활 인프라를 지원하여 유동인구 확대 추진
  (내용) 유학생가족(전체 또는 일부)이 로컬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유학기간동안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거주시설 또는 공용공간) 시설 조성 지원

27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사업 개관

-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의미) 은퇴자 5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거주지역 조성
  (내용)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은퇴자들에게 공동체 생활을 통한 상호교규가 가능토록 거주새설, 체험프로그램 등 마련·지원

- 청년 복합공간 조성
  (의미) 청년층 지역 정착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일자리와 주거시설을 동시에 지원하여 청년 층 유동인구 확대 추진
  (방식)청년층의 거주 공간과 창업 인큐베이팅, 구직 상담, 편의 공간 등을 동일 장소에 조성하여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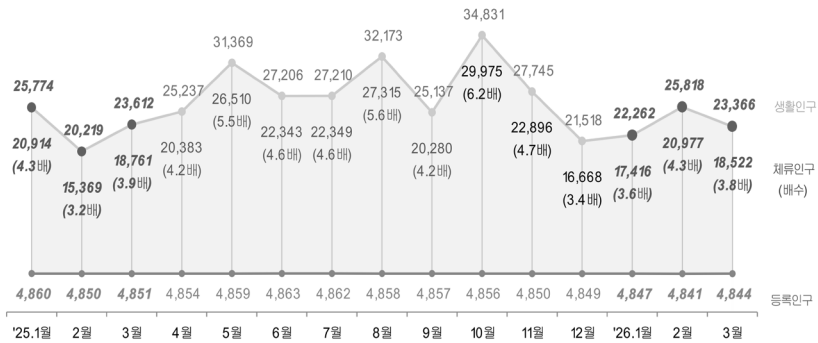
  런케이션(Learncation): 2025년 추가 도입
  (의미) 휴식과 관광을 즐기면서 동시에 현장에서 언어, 기술, 역사, 로컬 문화 등을 배우는 여행 및 교육 프로그램

  로컬벤처
  (의미) 지역의 고유한 자원, 문화,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 기반 창업 및 기업 지원

28

지역 인구 감소 대응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생활인구

-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뿐 아니라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한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
-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26.2월 약 2,582만명으로 1/4분기 중 가장 많았으며, 등록인구 약 484만명과 이의 4.3배인 약 2,098만명의 체류인구로 구성



29

지역 인구 감소 대응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생활인구(계속)

- 2024년 기준 인구감소지역 중 월평균 생활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하위 15개 지역)의 평균은 3.97배 (최솟값 3.07배, 최댓값 4.28배)
- 이는 상대적으로 생활인구를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쉽지 않은 지역도 존재함을 시사(장인수, 2025)

(명, 배)

지역	주민등록인구 평균	생활인구 평균	생활인구 비율
강원 양양군	27,586	442,688	16.05
강원 고성군	27,141	398,743	14.69
경기 가평군	62,401	883,762	14.16
강원 평창군	40,494	539,780	13.33
인천 옹진군	20,164	250,624	12.43
전북 무주군	23,125	240,912	10.42
충북 단양군	27,534	279,834	10.16
강원 정선군	33,806	338,618	10.02
충남 태안군	60,444	577,686	9.56
대구 군위군	22,673	204,554	9.02
전남 담양군	44,923	402,250	8.95
경북 영덕군	33,545	298,609	8.90
강원 홍천군	67,116	594,237	8.85
인천 강화군	68,976	606,323	8.79
경북 청도군	40,938	357,869	8.74

주: 1) 생활인구 비율은 주민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BIG DATA 활용, 2024.

30

지역활력타운사업 개관

- 인구감소지역 등에 주거·문화·복지·일자리 기능을 결합한 '주거복합거점'을 조성해 은퇴자·청년층의 지방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으로서,

-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해 18개 이상 개별 사업을 한 곳에 묶어 지원하는 다부처 협업 구조로 운영(행정안전부, 2023.2.12.; 관계부처합동, 2023.12.27.; 관계부처합동, 2024.5.10.)

  - (주거) 타운하우스(고령친화설계, 제로에너지) 형태로 분양 및 임대 주택 공급
  - (서비스) 생활 인프라(교육부·국토부)+지방소멸대응기금(행안부), 돌봄(복지부), 문화관광(문체부), 서비스(농림, 해수부) 등을 지역주민과 공동 활용
  - (일자리) 이주자 직업 활동 연계지원 (농식품부·해수부), 지역중소기업 지원(중기부)

31

지역활력타운사업 개관(계속)





32



03 향후 대응 방향(장인수 외, 2025)

지역 인구 변동과 정책 간 높지 않은 유기성

- 지역의 정책사업의 수요와 정책 사업 추진 내용(계획)과의 유기성을 긴밀하게 제고할 필요
  -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의 결과물로서의 투자계획 작성의 필요성"과도 그 궤를 같이 하는 논의
- 인구감소지역으로부터 제안된 투자계획서가 과연 두 요인 간 유기성을 충분히 제고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존재. 단적으로, 주보혜 외(2022)의 00군의 투자계획 내용 중 "지역상생 청년·일자리 케어"가 제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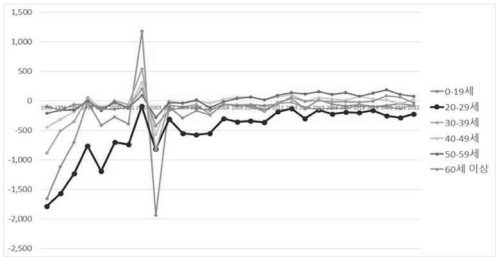
34

지역 인구 변동과 정책 간 높지 않은 유기성

- 00 군의 5세 단위 순유입 인구 특성은, 1995-2022년 간 관측기간 초반부터 0-29세(파란색 볼드 라인)이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볼 때 특히 순유출 규모가 큼.
  - 순유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관측기간 내내) 순유출 규모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큰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

- 이는 00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층 유출 대응 관련 사업의 실효성이 높지 않음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동시에,
  제시된 주요 전략으로서 "지역상생 청년·일자리 케어"가 과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청년층의 순유출 양상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도출된 전략인지에 대해서 재고해 볼 필요성을 시사

(단위: 명)



35

지역 인구 변동과 정책 간 유기성 제고 평가 반영

- 사례 지역은 베이비부머 세대 중심의 50, 60대의 신중년층의 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 최근 5세 단위 연령별 순이동 인구 규모 추세는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신중년층의 경우 유일하게 순유입을 보이고 있기 때문

- 또한, 신중년의 적극적 노화(active aging)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장인수 외, 2023).

- 인구변동과 정책 간 유기성 제고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의 본질적 목표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의의가 다분, 이에 관련 제도적 장치가 선결될 필요

- 지역 인구 변동과 정책 간 유기성을 제고하는 방향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자체적인) 성과평가 방식과도 맞물려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분석한 내용이 투자계획에 반영된다면, 보다 내실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36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및 투자계획 작성 관련 개선 방향

- 인구감소지역 등에 주거·문화·복지·일자리 기능을 결합한 '주거복합거점'을 조성해 은퇴자·청년층의 지방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해 18개 이상 개별 사업을 한 곳에 묶어 지원하는 다부처 협업 구조로 운영(행정안전부, 2023.2.12.; 관계부처합동, 2023.12.27.; 관계부처합동, 2024.5.10.)

  - (주거) 타운하우스(고령친화설계, 제로에너지) 형태로 분양 및 임대 주택 공급

  - (서비스) 생활 인프라(교육부, 국토부)+지방소멸대응기금(행안부), 돌봄(복지부), 문화관광(문체부), 서비스(농림부, 해수부) 등을 지역주민과 공동 활용

  - (일자리) 이주자 직업 활동 연계지원 (농식품부, 해수부), 지역중소기업 지원(중기부)

37

지역활력타운사업 추진 관련 개선 방향

- 다부처 협업을 통해 개별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공급함으로써 단순 주택공급을 넘어 정주여건 전반(주거, 돌봄, 문화)을 함께 개선하는 사업이라는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공모 대상 지자체 수가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인구 위기 지역 수에 비해 적고, 일자리 창출에 따른 청년 유입 및 유출 방지의 가시적 성과가 모호하며(지속적인 순유출 특성, 순유출의 등락 반복 등), 사업 참여 부처별 지원사업 간 연계성 부족과 절차 복잡성이 여전히 한계점으로 노정

-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버넌스 및 민간 참여 개선과 관련하여 상향식 기획 및 추진을 통한 지자체 기획력 제고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는 민간이 상권 설계를 포함한 사업전략을 직접 기획하고, 지자체는 인프라, 규제, 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상향식 기획 및 추진을 도모

  -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중앙 컨트롤타워의 컨설팅 및 조정 기능을 활용해, 지역별 민간 개발주체, 사회적경제 조직, 대학 및 지역별 특화된 중간지원조직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사업 전 과정(기획–조성–운영)에 참여함으로서 지자체 기획력을 제고할 필요

38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방안

- 충분한 투자계획 작성 및 컨설팅 기간을 확보 운영하여,

  사업 기획 및 초기 단계에서 인허가, 부지 확보, 주민협의 등 선행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

- 또한, 모든 인구감소지역에 동일한 재정 자율성을 부여하는 현 방식은 지자체 간 사업 기획 및 집행 역량 격차를 고려하지 못하고 성과 측면의 결과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하므로,

  집행률 등 종합적 평가를 별도로 추진하여 역량 최하위 범주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별도 컨설팅단의 직접 지원을 받도록 하며 단독 신청보다는 권역 묶음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필요

39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국가균형성장 정책 추진 체계 구축 필요

- 지역 인구 감소는 지역경제 침체, 고용 감소, 기반 서비스 축소로 이어져 삶의 질 악화 초래
- 총인구 감소와 다르게 지역 인구 감소는 20-30여 년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랜 기간 누적된 결과적 양상이므로 보다 국가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이 절실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심화는 사회적 갈등, 정치적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로 이어지며, 국가경쟁력 저하 초래
- 인구 감소는 단지 지역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완화 등의 국가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함.
-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한 통합적 거버넌스 기반 체계를 구축하여 인구, 경제, 교육, 주거, 복지 등 다분야 연계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지역 인구감소는 개별 지자체의 정주지원, 관광, 청년유입 등 단편적 사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일자리와 기업, 대학, 의료 등 핵심 기능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시적 공간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임.

40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국가균형성장 정책 추진 체계 구축 필요

- 지역 인구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의 전제조건이며, 지역 인구 위기를 넘어서 지역 간 불균형 심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으므로 관련 핵심 정책 과제의 유기적 조합을 통한 적극 대응이 필수적

국가균형발전

- 수도권 집중 완화(인구, 청년층, GRDP 등)
-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
- 산업/인프라 재배치, 재구조화

↓

비수도권 정주 여건 개선

- 일자리 양적, 질적 제고
- 고등교육기관 질적 제고
- 교통, 보건의료 등 사회인프라 양적, 질적 확대

↓

지역 인구 감소 완화

- 청년 인구 유출 완화 및 유입 도모
- 친출산 환경 조성을 통한 자연적 감소 완화

41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가족서비스 전략 포럼
인구 위기 시대, 가족서비스의 새로운 길을 찾다

인구 위기 × 가족센터에서 길을 찾다

안재희 본부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사업본부

■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의 지역 특성, 공간군집, 가족센터 운영 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종합 분석의 의의

1.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특성 분석을 통한 핵심 특성 도출 의의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기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석이 새롭고, 그 분석의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분석이 인구감소, 나아가 인구감소지역 지역 특성을 가족센터 운영과 실제적인 연계성에 대해 다양한 분석 및 방향제시뿐 아니라 이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영역에 대한 분석 내용을 보더라도 방대한 자료 제공뿐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돋보입니다. 다만 금번 토론문은 앞서 발제해 주신'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 지자체 지원제도의 방향성' 발표 내용에 기초하되 지역 센터 현장을 중심으로 제한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1) 먼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12개의 주요 지표 분석, 이에 따른 핵심 특성을 '레이더 차트'로 비교 분석하여 감소 지역, 감소지역평균, 관심지역평균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한 점은 인구감소지역의 현 상황을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인구 관련 상세 자료 제공뿐 아니라 넓게는 저출생, 고령화와 연계된 여러 유관 정부부처 차원에서도 보다 실증적 정책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2) 또한 전체 시군구를 공간군집분석을 통해 5개 군집(소규모 고령 농촌형/대도시 밀집 주거형/외국인 집중형/인구증가 성장형/저출산 1인가구형)으로 구분하고, 각 군집별 특성을 지도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시한 부분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군집 형태에 따라 이미 지자체별로는 그동안 다양한 인구감소 대응 노력들이 추진되어 온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발제 연구인 정부, 지자체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다양한 형태로의 분석과 관점을 접목하여 개별 지자체의'모델사례 발굴'그리고 개별 지자체를 넘어 '공통적용 가능 사례'를 도출하고, 나아가 이를 다시 지역에 적용해서 '지역 단위 모형'을 도출해 내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실제적인 결과분석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3) 이에 더하여 가족센터의 예산지원유형별로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비감소지역으로 구분한 분석도 현 가족센터의 유형(가,나,다,라,마 등)에 대한 향후 보완방향 마련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위탁형태에 따른 비교에서도 위탁, 직영의 특징이 일정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도 가족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시 고려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4) 한편 가족센터의 직원수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도 인구감소지역과 비감소지역 센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자료를 제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센터의 이용자수 비교에서는 전체 이용자수의 경우, 비감소지역이 감소지역의 2.5배이지만 천명당 이용자수로 환산하면 인구감소지역이 비감소지역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수 규모는 작아도 주민 대비 참여율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용자수 비교를 통해 볼 때, 개별 가족센터의 경우 해당 지역 내 가족서비스 지원에 대한 방향 설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좀더 세부적으로 서비스 필요 이용자 발굴 및 확대 그리고 지역 내 센터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 반영되어야 하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끝으로 이용자 만족도와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도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내부 4개 군집 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역 유형 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항목은 접근 편리성(인구감소지역 4.37 vs 비감소지역 4.22), 지역사회 관계확대(인구감소지역 4.17 vs 비감소지역 4.01), 시간대 다양성(인구감소지역 4.19 vs 비감소지역 4.06)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규모 지역에서 센터의 사회적 연결 기능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분석 영역(군집 인구유형, 예산지원유형, 직원수, 이용자수 등)에 있어서도 센터 운영의 성과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며, 이는 이후 관련 평가(부처 센터 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지자체 지도점검 등)와 어떻게 연동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활성화 추진 노력

올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해 크게 3가지 축으로 협력, 연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하나는 '센터 운영 애로에 대한 점검과 지원'이고, 또 하나는 '가족정책 연계기능 강화'이며,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의 맥락과 닿아 있는 '지역 맞춤 지원기반 마련'입니다. 마지막 지역 맞춤 지원기반 마련의 한 테마로 지역 인구기반에 따른 가족서비스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인구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무모한 도전으로의 기획이 아니라 실제 인구문제와 직결되는 지역 현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가족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문제를 정부정책, 개인 선호(가치관), 비용(출산양육 부담), 산업 구조(기술집약 사회) 등 다양한 원인에 대한 각각의 대응책에 대한 국가의제로서의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센터 자원과 지역사회 내 역할에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문가 인터뷰로 참여해주신 가족센터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담아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비록 이 자리에서는 심도있게 다루기는 어려우나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가족정책 관련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을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광역센터 설치 또는 현 시도·광역·거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반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 방대한 연구를 수행해 주신 연구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지역 센터 관계자분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찾아주신 많은 참여자분들께 거듭 감사 마음을 전합니다.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문

김소영 본부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

‘인구 위기 시대, 가족서비스의 새로운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의 새로운 역할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족서비스 전략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 첫해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는 2026년의 시기적 특성을 고려할 오늘의 포럼 주제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토론문에서는‘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발표문에서 제안한 핵심 과제에 대해 다음 세 가지를 제언드립니다.

첫째, 발표문은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 운영 개선의 핵심과제로 자율예산 신설과 특례지침 마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사업 체계, 예산 부족, 실적 중심의 평가 체계 등이 인구감소지역 센터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또한 현 정부가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국정 기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시도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추진하기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존재합니다. 먼저 가족센터의 핵심 기능과 역할이 여전히 모호하고, 가족 및 가족서비스에 대한 현장의 이해가 단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센터에 기획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가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역량 강화도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료에도 언급된 것처럼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가시화할 것인지, 즉 센터 운영평가 체계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발표문은 모두 9개의 과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인구감소지역에 특화된 과제부터 범용적 적용이 가능한 과제까지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제안도 있지만 그동안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개별 과제의 추진 전략과 더불어 종합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성평등가족부의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방향과 정책과제들을

근거로 발표자가 제안한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가족센터 관련 정책과제 및 추진체계 내용〉

1-1-1. 위기·고립 가족 발굴 및 서비스 지원 강화
1-1-2.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1-2-2. 이주배경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1-2-3. 1인가구 지원 강화
2-1-3. 청소년(한)부모 등의 자립 및 생활 지원 * 조손가족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포함
2-3-2. 지역 기반의 가족 소통 공간 조성 * 생활 SOC 가족센터 건립 및 확충 포함
3-2-1. 새로운 가족 돌봄 수요 대응 * 생애 말기 돌봄 지원, 경계선 지능인 등 복지 사각지대 가족 지원 포함
4-2-2. 지역밀착형 가족친화환경 조성 지원 * 가족친화센터 단계적 설치 포함
추진체계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족센터 체계 개편 - 가족센터의 지역사회 가족서비스 허브 역할 강화 - 광역 단위 가족센터 설치, 운영 - 사업구조 및 운영, 평가방식 개편 ○ 지능형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 가족센터 서비스 AI·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 가족사업 맞춤형 생성형 AI 기반 챗봇 도입 추진

셋째, 복지관 부재 지역에서 지역 복지 통합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족센터가 이른바'패밀리 허브'로써 기능함을 의미하는데, 현재 교육·상담 등 센터 내부 자원 활용과 프로그램 연계 중심으로 운영하는 가족센터의 핵심·기본사업과는 운영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이 지역 안에서 실질적 운영·작동하려면 센터 사업의 방향성과 목표, 인력의 자격요건 등 운영 요소를 정비하고, 관련 법률·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 운영개선 및 정책방향 토론문

전대욱 실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위한 가족센터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정부 및 지자체 지원정책에 관한 인상적인 분석과 시사점을 제시해주신 가천대 유재언 교수님과 보사연 장인수 박사님, 그리고 포럼을 준비해주신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자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좋은 토론의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두 발제는, 우선 인구감소 정책은 감소추세를 막으려는 완화(Mitigation) 정책도 중요하나 지역 현장에서는 변화된 인구구조 속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적응(Adaptation)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으며, 적응에 있어서 가족센터는 지역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 적응 정책은 통합적 정주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주민의 이탈을 막고 감소된 인구에 적응하도록 지역생태계를 지속시키고 새롭게 이를 재편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주민을 위한 주거·의료·문화·체육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돌봄서비스까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상향식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을 통해 주민이 실제로 머무르며 느낄 수 있는 삶의 질 중심의 적응형 여건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적응정책에서 특히 가족센터는 지방소멸을 방어하는 강력한 사회적 앵커기관으로서 단순한 주민 복지시설을 넘어 지역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이웃간 관계망을 회복하는 핵심적인 주민거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센터는 기존의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족 위주 서비스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복지·보건·교육 정보가 한곳으로 수렴하고 상호 긴밀히 연계되는 통합 사례관리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생활SOC로서 기능해야 하며, 인구감소지역과 같은 넓은 면적의 인구과소지역에서 1인가구·조손가정 및 고령화,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급증 등 실질적인 인구구성 변화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첫 번째 유재언 교수님의 발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족센터에 대한 주민의존성이 더 높은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족센터가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주민수요에 대한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상기와 같은 적응정책의 관점에서 센터가 정책 전달체계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가족센터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지역 가족센터가 원활히 운영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행·재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유의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두 발제에서는 가족센터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중심의 상향식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복지, 일자리 및 민생경제 등에서 다양한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이에 관계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추진체계를 구성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공동체가 참여한 포괄적이며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한 경우들이 많지 않으며, 정책수혜자들과 정책서비스 공급자들의 역할을 구분하고 이원화하여 접근할 때 가족센터와 같은 앵커기관들이 정책 전달체계의 말단에 서서 공급자 중심적인 시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역사회의 앵커기관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나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참여한 공동생산(co-production)을 지향해야 하고, 이 경우 가족센터는 정책전달형 지원체계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분리되지 않고 두 이해당사자가 통합되는 거버넌스형 지원체계로서 보다 큰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게 되며, 앵커기관을 중심으로 주민플랫폼과 주민의 자조적인 주체들이 파생(spinoff)되는 지역의 통합돌봄 생태계 구축의 중요한 노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지방정부는 이 거버넌스에서 공간 및 인프라 제공이나 운영 주체로서 작용하는 역할을 넘어서, 지역대학과 주민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조직 등 다양한 주체들이 기획단계부터 조성, 운영, 성과관리 및 환류 등 정책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제도적 기반구축과 행·재정적인 지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가족서비스는 주민과 밀착된 지방정부의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정부의 담당부서는 위임된 사무의 수행을 넘어 지역 통합돌봄 생태계 조성과 육성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발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권한위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행·재정적인 지원과 제도개선 노력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 (참고로, 최근 일본에서는 인구과소지역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행정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초간 공동사무, 광역-기초간 공동사무의 형태로 연계·협력을 통한 자원공유·조달 등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센터 역시 필요시 생활권 중심으로 지자체간 연계·협력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 두 번째 장인수 박사님의 발제문에서도 이러한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발제에서는 국가 인구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유기적 재설계와 국가차원의 거시적 구조개편을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연계·협력은 물론,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역할구분 및 기능적 협업을 통해 지역실정에 부합하도록 기금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안하고 있어, 이는 정책추진에 있어서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핵심적인

고려요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가족센터의 핵심적인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책수혜자인 주민과 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통합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적 기반의 정비는 물론 기금의 활용이나 포괄예산 등 지역맞춤형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의 고도화가 요구됩니다. 셋째, 가족센터는 단순한 정책전달의 말단체계를 넘어서 인구과소지역의 적응정책에 있어서 핵심 앵커기관이자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고 서비스가 교환되고, 주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생태계의 촉진자 역할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 운영 고도화를 위한 현장의 제언

이정문 센터장
장성군가족센터

장성군 가족센터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토론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유재언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제가 FGI에서 현장의 어려움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번 연구를 통해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로 정리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FGI에서 공간과 지역 인프라, 인력 부족, 예산의 칸막이 구조, 사업의 과다와 정체성에 대한 고민, 찾아가는 서비스의 어려움, 지자체와의 역할 조정, 실적 중심 평가의 한계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오늘 발표해주신 내용들이 특정 센터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오늘 발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가 단순히 규모가 작은 가족센터가 아니라, 대도시와는 다른 환경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성군은 인구감소지역이지만 2025년 말 기준 1,000여명의 인구가 증가했고 전국 출산율 2위를 달성하는 등 단순히 모든 지표가 취약한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구수와 고령인구, 1인가구, 외국인 등의 지표는 인구감소지역 평균과 비교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이라는 하나의 기준만으로 가족서비스를 획일적으로 설계하기보다는 **지역의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의 '역설적인 강점'**입니다. 전체 참여인원만 보면 비감소지역보다 적지만, 인구 1,000명당 참여인원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인구감소지역의 참여율이 비감소지역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접근 편리성, 지역사회 관계 확대, 시간대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도 인구감소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가족센터가 **주민들에게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요한 생활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FGI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말씀드렸던 참여자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고도화 운영의 변화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 네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장성군은 '인구가 적은 지역'이 아니라 '생활권이 분산된 지역'이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연구에서 장성군은 전남의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소규모·고령 농촌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인구 규모가 작고 고령인구와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장성의 어려움은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장성군은 1개 읍과 10개 면으로 생활권이 분산되어 있고, 읍에 소재하고 있는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리와 이동이라는 또 하나의 장벽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프로그램의 수나 이용자 수를 볼 것이 아니라, **"주민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도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의 현장에서는 노후 차량과 이동수단 부족,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에 따른 부담, 야간·주말 운영 부담 등이 주요 어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가는 가족서비스를 확대하자는 정책 방향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찾아가라'는 정책적 요구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가기 위해 필요한 **차량, 인력, 이동시간, 출장에 따른 인력 공백까지 함께 지원**되어야 실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둘째, 가족센터의 역할을 '프로그램 제공기관'에서 '지역사회 연결 플랫폼'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장성군과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가족센터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녀 돌봄은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 건강 문제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취업은 여성일자리센터, 청년 정착은 지자체 청년정책과 청년센터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장인수 연구위원님의 발표에서도 인구감소 문제는 정주지원이나 청년유입 같은 개별 사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일자리·기업·대학·의료 등 지역의 핵심 기능과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센터가 모든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가족을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을 연결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가정을 필요한 기관으로 연계하는 '지역 가족 서비스 허브'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센터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기관이 아니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가장 잘 연결해 주는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는 '작게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연구에서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는 비감소지역에 비해 인력 규모가 작고, 최소예산 유형인 마형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센터 가운데 마형이 50개, 55.1%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구가 적다고 해서 업무가 적은 것은 아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군의 경우 복지관의 부재로 시범 사업이 추가될 때마다 주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기존 사업의 질을 유지하고 종사자가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워지며, **업무과다와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종사자들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의 면적, 읍·면 분산 정도, 이동 거리, 고령화, 외국인·다문화가족 규모, 지역 내 복지·교육·의료자원 등을 함께 고려해서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인력 산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평가도 '몇 명이 참여했는가'에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FGI에서 특히 공감했던 부분이 실적 중심 평가의 한계였습니다.
현재의 평가체계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나 운영 횟수처럼 숫자로 나타나는 성과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군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0명의 주민이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100명이 일회성으로 참여하는 것의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가 충분한 지역의 네트워크와 그렇지 못한 지역의 네트워크 또한 숫자만으로 점수를 적용하는 방식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도 실인원과 연인원 중심의 평가가 실제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외국인 지원이나 지역의 특화사업 등이 실적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의 평가에서는 **지역주민의 서비스 접근성, 기관 간 연계, 지역사회 관계 형성, 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복합적인 가족문제에 대한 통합적 지원, 지역 특화사업을 통해 만들어낸 변화 등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가족센터가 지역 주민 한 사람, 한 가정과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성과로 인정해 주는 평가체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연구로 담아주신 유재언 교수님, 장인수 연구위원님, 연구진께 감사드리며,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족센터 운영 고도화 방안은 오히려 인구감소라는 현실 속에서 현재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현장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가족서비스 전략 포럼 자료집

발 행 일	2026년 8월 26일
발 행 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발 행 인	박구연
주 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1층
전 화	(02) 3479-7600
팩 스	(02) 3479-7699
홈 페 이 지	www.kihf.or.kr
기 획 · 편 집	가족사업지원부
인 쇄 처	(사)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발췌하거나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가족서비스 전략 포럼

자료집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